

그러나 이러한 부시 정권의 전쟁정책을 중심으로 한 세계전략이 처한 가장 중요한 딜레마는 평화의 시기에 전쟁의 논리와 폭력체제의 강화를 합리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2차대전이 끝난 이후 평화가 도래하자 군사경제의 활력이 무너지면서 위기에 직면한 미국 자본주의체제가 전쟁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었던 “NSC-68”을 통한 군비증강정책 논리의 연장이다.²³⁾ 평화가 충분히 가능한데 전쟁을 하려는 체제, 그래서 이에 대한 국제적 문제 제기는 끊임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미국은 무리한 선택을 하다가 그것이 결국 미국 자신의 곤경을 초래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즉, 정당성을 상실한 전쟁의 추진으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고 한편으로는 국제적 반전연대가 강화되는 것과 함께, 거짓의 양산과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로써, 겉으로는 공화정의 민주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현실에서는 제국의 행동을 보이는 모순으로 파괴되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내부의 비판과 저항은 필연적이 되는 것이다. 미국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이민자와 외국인의 민권을 제한하는 <애국법안(Patriot Act)>이나 의회의 견제력을 떨어뜨리고 중앙연방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며 민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적지 않은 <조국 안보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 신설, 그리고 전쟁기간 중에는 거짓 정보 확산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언론의 협조적 역할이 중요해진다. 식의 논리(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제작, 내외의 언론기관과 정부에 확산시키는 이른바 심리전 수행에 필요한 전략 영향국: Office of Strategic Influence 설치 논의)는 모두 이러한 미국 사회의 공화정적 가치의 위기를 보여준다. 소위 신보수주의 세력의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그 이론적 뿌리를 가깝게는 닉슨 당시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던 루이스 파웰 주니어(Lewis Powell Jr.)의 메모랜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사고는 이후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 수립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는 베트남 전쟁 패배의 상황에서 위기에 몰린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1) 대학 이상의 사회과

23) Containment: Documents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ed. Thomas H. Etzold & John Lewis Gadd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참조, 평화 시기에 전쟁 경제를 촉발하기 위해 전쟁공포를 이용한 경우를 분석한 책으로 Frank Kofsky의 Harry S. Truman and the War Scare of 1948: A Successful Campaign to deceive the n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그리고 냉전전략의 구체적 구상과 추진세력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서는 Jerry W. Sanders의 Peddlers of Crisis: The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Boston: South End Press, 1983)가 있다.

학 교육 (2) 대중 언론 매체 (3) 공공정책이 토론되고 결정되는 조직 (4) 사법기관 등에 보수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반발을 날로 깊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21세기 세계전략은 지구촌 전체에 대한 독점적 규제력을 확보하려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에 대한 반체제적 규제력 강화의 흐름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국 해체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지배계급은 당장에는 반동적 폭력체제의 동원으로 그 해체 과정을 막아내려 하겠으나, 세계적 차원에서 성장하고 연대하는 반체제적 대안 운동의 역량이 어떤 전략 아래 힘을 모아나갈 것인가에 따라 제국의 세계 지배 프로젝트는 중대한 전환의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전협정 50주년 체제 문제도, <전쟁을 통한 자본의 독점적 지배>를 추구하는 제국의 지배전략으로 위협받고 있는 민족국가의 주권 및 생존, 그리고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지켜낼 반체제적(anti-systemic) 동력을 정치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창출하는 사안이 되어야 한다.²⁵⁾ 그렇게 될 때, 한반도는 아메리카 제국의 폭력과 지배의 축을 흔들고 새로운 평화의 기운을 세계사적 역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부시 정권의 전략적 기초

(1)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과 그 기초이론

미국의 체제적 선택을 보다 구체적으로 밀고나가는 부시정권의 세계전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한 기초는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보고서에

24) 그는 이 메모를 통해 각 교육기관, 언론기관, 정치조직이 미국 재계의 견해와 입장을 주지시켜야 하며 그래서 미국의 체제적 선택의 표현인 대외정책에 대하여 비판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사법기관의 역할을 통해, 비판적 반론이 법적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법해석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후 부시정권의 법무부장관 Ashcroft의 입장과 그대로 일치한다. Powell Memorandum, www.eurolegal.org

25) World Social Forum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제연대 운동이다. 지난 2002년 여기서 발표한 Social Movement's Manifesto: Resistance to Neoliberalism, War and Militarism; For Peace and Social Justice는 우리 운동의 세계적 연대를 위해 주목할 문건이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ed. by William F. Fisher & Thomas Ponniah, (London: Zed Books, 2003)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문서는 냉전시대를 승리로 이끈 미국의 힘이 이제 역사상 전례 없이 강력해졌으나, 새로운 위협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평화,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 자유 무역 체제 등을 보호, 인류적 번영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 전략보고서는 9.11 이후 미국의 변화한 전략의 요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지난 60-70년대의 “안보국가론(National Security State)”의 확대이자 헨리 키신저가 미국의 국가적 역량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남고 처지는 힘(surplus of power)”²⁶⁾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겠다.

이 전략 보고서의 핵심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등장한 현실에서 “필요하다면 <선제공격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대목으로서, 이는 단지 하나의 전략 선택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주의 노선에 대한 내외적 규제는 해체하고, 자신의 통제력은 강화하는 가운데 국제질서와 미국 내부의 정치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주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9.11 이후의 변화된 현실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부시 정권의 세계 지배 전략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오래 전부터 강조해왔던 바이며, 9.11은 그러한 주장의 현실적 근거를 마련해준 계기일 뿐이라고 하겠다.

얼마 전 미 국무부 정책 기획국장 자리를 사퇴하고 <외교위원회(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²⁷⁾의 신임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의 경우, 지난 2000년 11월 “제국 아메리카(Imperial America)”라는 제목의 짧은 논문을 발표, 이제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초강대국가라는 역할을 넘어서서 세계 전체를 통괄하는 제국의 위치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26) Henry Kissinger,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Toward a Diplomacy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A Touchstone Book, 2001) 키신저의 외교개념은 나폴레옹 이후의 유럽에 대한 반동적 봉쇄동맹체제인 메테르니히의 신성동맹 전략에 기초해 있다. A World Restored, Metternich, Castlereagh and the Problem of Peace, 1812-1822,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따라서 그의 논지에 따른 미국의 외교정책이란 반체제적 대안(anti-systemic alternative)에 대한 봉쇄 포위 전략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영향력이 여전한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사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7)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미국의 독점 대자본의 대외정책 요구를 이론화하는 현장임을 Laurence H. Shoup & William Minter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다. Imperial Brain Trus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New York: Monthly Review, 1977) 리차드 하스의 외교위원회 회장 직 이동은 미국의 단독적 외교행위가 점차 동맹세력 내부의 지지를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는 자신의 국무부 재임 시와는 달리, 동맹세력 구축을 통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전략을 취할 움직임이다. 이는 부시정권의 일방적 군사주의 노선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의 정치체제를 그에 맞게 다지는 일이 관건(Imperialism begins at home.)이라고 하면서, 군사력 강화와 정보기관의 통합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시시켰다. 리차드 하스가 부시 정권의 주요 정책 책임자였다는 점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점령정책의 정책적 지휘자였으며 부시 제1기 정권 하에서 안보보좌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부시 정권의 정책 사고를 잘 보여주는 보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1997년에 출간된 그의 책, <주저하는 보안관, 냉전 이후의 미국(The Reluctant Sherif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²⁸⁾>에서 이미 그 골격이 정리된 바 있다. 그는 여기서 냉전 이후 통제력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세계를 다시 미국의 규제(regulation) 아래 두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동맹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하고 실현성이 있다면(if necessary and feasible)” 단독적으로라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제도에 묶인 “경찰”과는 달리,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진 “세계 보안관”으로서 이제는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리차드 하스의 이러한 개념들은 “규제”가 자본에 대한 규제로만 이해되었던 신자유주의 논법에서 다른 나라들의 “일탈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바뀌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규제조치로서 미국의 전략 보고서에서 “필요하다면” 선제공격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식화되었다. 또한, “조국 안보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 창설에서도 나타나듯이 제국의 안전은 내부에서 시작한다는(Ultimately, the foundation of the American strength is at home.) 논리로 앞서 지적한 바대로 공화정의 원칙들을 제국의 목표를 위해 규제하는 체제를 지향함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리차드 하스의 아메리카 제국 프로젝트의 군사주의 노선은 그의 1999년 재개정된 그의 책 <개입: 미국의 군사력을 탈냉전 시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Intervention: The Use of American Force in the Post-Cold War World²⁹⁾>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명분으로 하여 군사적 개입이 정당함을 역설하고, 그에 따라 그 대상 국가의 “국가건설(Nation building)”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국가건설 과정에서 그는 일체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낼 수

28) The Reluctant Sherif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7)

29) Intervention: The Use of American Force in the Post-Cold War World.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있는 점령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맹체제가 필요한데, 이는 럼스펠드의 언급대로 “목적이 동맹을 규정하는 것이지 동맹이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the mission determines the coalition. The coalition must not determine the mission.)”, 그래서 미국의 판단기준과 행동반경, 능력이 제한 없는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폴 월포비츠(Paul Wolfowitz)의 “1992-1994년 국방계획지침 문서”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정리되게 된 것이다.

부시정권의 세계전략 사고가 극명하게 드러난 이 같은 논리는 미국 외교사에 교차적으로 등장한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의 <함포외교(Gunboat diplomacy)>와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의 <달러 외교(Dollar Diplomacy)> 가운데, 그 중심이 무력 사용을 앞세우는 <함포외교> 쪽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³⁰⁾ <함포외교>는 최강의 제국주의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미국의 일방적 행동과 결단을 중요시하는 반면, <달러 외교>는 세계 자본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제를 강조하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선택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그 제국 경영 방식에 따른 전략적 차이이지, 제국 자체를 놓고 본 질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함포 외교의 선택이 달러 외교의 포기는 아니며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대상이 없는 안정의 독점적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이 효율성을 가질 것인가가 그 논란의 내용이 된다.

(2) 부시정권의 세계전략, 그 지정학적 구조

부시정권의 세계전략은 지정학적 편재로 보면,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압도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점으로 하여 세 가지 위계 수준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일본을 포함한 유럽을 미국이 이끄는 동맹체제 내부에서 주니어 파트너 지위로 유지하는 것, 둘째, 한국 등 중간급 국가들을 종속적 하위 단위로 통합하는 것, 셋째,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지역을 미국의 직접적 지배영역으로 관할하는 것 등이 된다. 그리고 넷째,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 내부로 편입하도록 하는 압력을 꾸준히 가하는

30) 미국 외교사의 중요한 저작으로서 Walter LaFeber의 *The American Age: US Foreign Policy at Home and Abroad, 1750 to the Present*,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를 권한다.

것이다. 즉, 미국을 최고 지휘부로 하는 서구 제국 동맹체제의 견고화와 이에 종속 의존하는 중간급 국가, 그리고 자원과 노동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력의 대상이 되는 제3세계 지역이 하나의 통합단위가 되며, 중국 등이 이에 맞설 것인지 아니면 편입되어 자신의 위치를 미국의 의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정하든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로써 미국 주도의 세계적 자본축적 전략(아메리카 제국주의에 의한 영원한 착취지배구조)의 원활한 구조 형성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위계질서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그 기반이 되는 제3세계 지역의 자원과 노동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 과시가 된다. 최근 부시 정권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까닭도 바로 이러한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중동지역의 원유 장악은 단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정책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타 국가들, 특히 유럽의 독자적 노선을 규제하는 매우 중대한 고리가 된다.³¹⁾ 이라크 침략전쟁은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유로(Euro)화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정치경제적 결속과 군사적 독자성을 막고 미국의 동맹체제 내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라고 하겠다.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은 반전평화 운동의 연대라는 각도에서보다는, 그러한 미국의 전략 목표의 거부였던 것이다. 제1차 부시정권 시기 걸프전쟁의 전략 목표도 탈냉전의 기류를 타고 당시 경제적 통합과, 나토(NATO)와는 별도로 독자적 신속 배치군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유럽을 견제하고 미국의 세계전략 구도 속에 이들을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결속 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동의 적”을 부각시키고 전쟁정책을 정당화하면서 제국 통솔의 주도권을 장악해나갔다. 미국의 세계전략 구도 속에서 소위 “악의 축”이란 이렇게 보자면, 그 대상 국가의 속성 자체가 악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국 통합 전략에 순응하지 않은 주요 고리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악”의 규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진영의 결속을 위해 필요한, 그 고리에 대한 고립, 봉쇄 전략의 정당화 근거로 작용할 뿐이다.

31) Peter Gowan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그는 미국이 과거 냉전시기에 각 지역에 행사했던 주도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미국의 세계전략상 가장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은 변화한 현실을 수용하여 이에 합류하기 보다는 자신의 질서에 다른 나라들을 복속시키려는 무리를 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US Hegemony Today”, in *Monthly Review*, July-August 2003

• 제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이해관계에도, 동북아시아 전체의 결속을 저지하고 중국이나 일본이 이 지역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작업의 사슬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중동지역과는 달리 자원의 문제 보다는 지정학적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장악이 성공하게 될 경우, 미국은 일본의 엔화나 중국의 원화가 달라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장래의 기축통화로 나서게 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동북아시아의 독자적인 군사적 블록화를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거론했던 지난 2002년 10월의 상황은,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로써 동북아시아 전체의 대미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이 지역이 미국의 주도적 영역에서 이탈할 수 있는 조짐을 보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여, 전체적으로 부시 정권의 세계전략의 특징을 총괄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냉전 시기에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기존의 국제법적 규제나 국제조직 내부의 논의구조가 이제는 자신에게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단독적 일방주의를 내세워 각 지역 국가의 역할을 위계질서화하고 자신의 세계제국 체제 내부에 편입, 통합 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동원되는 이데올로기는 “탈냉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위협에 대한 문명권 전체의 공동대응의 긴박성”이며, 자신은 이러한 문명권 전체의 가치를 수호하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의 사명 의식을 가진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은 곧 “공동의 적”이 되는 것이며, 인류사회를 위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시 정권의 세계전략은 현실에서 그 자체가 도리어 정작의 인류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죽음, 폭력적 지배와 점령, 그리고 야만을 결과하고 있다. 한반도는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폭력체제의 위협 앞에 있는 것이다.

3. 아메리카 제국주의 발전 경로와 이론적 논의

오늘날 미국의 세계전략은 다시 강조하건데, <제국의 지배전략>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국>의 개념은 최근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며, 미

국 역사 내부에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국가발전의 중심전략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가진 근본성격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오래 동안 미국 사회에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타부였다.³²⁾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펼쳐졌던 60-70년대에도 일부 좌파운동권에서만 제국주의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다양한 세력이 반전운동에 참여하던 조건에서 그 같은 논의의 대중적 확산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제국에 대한 논의가 좌파에만 한정되어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보수세력 자체가 스스로 “제국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변화로 인하여 이에 대한 논의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로버트 터커(Robert Tucker)와 데이빗 헨노익슨(David Henoickson)의 <제국의 유혹, 새로운 세계질서와 미국의 목적: The Imperial Temptation, The New World Order and America's Purpose³³⁾>의 경우, 탈냉전 직후 미국의 세계전략을 새롭게 짜야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부시 제1기의 제국건설 정책을 표면화하기 시작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2000년대에 이르면 1990년대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앤드류 바세비치(Andrew J. Bacevich) 같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있는 학자들조차도 그의 책 <아메리카 제국(American Empire³⁴⁾>을 통해, 미국의 모든 세계전략은 결국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에 있음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다. 즉, 최근 미국은 자신의 제국주의 전략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속내를 밝히고 있는 셈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제국 건설의 역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미국의 공화정 체제 형성 초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미 “자유국의 제국(Empire of Liberty)”이라는 개념으로 미국의 역사적 지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설정한 바 있으며 공화정의 가치와 제국의 야망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시켜나갈 것인가를 구상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의 독립전쟁은 식민지 해방투쟁의 성격을 가졌다기보다는, 영국의 제국주의 통치체제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독자적 경로를 통한 제국건설의 목표를 지닌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기 이전에도 이미 미국은 아메리카 토착주민들에 대한 대량

32) New Left Review의 창립 편집 위원이기도 했던 Norman Birnbaum은 바로 이렇게 미국인들 자신의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한 인식이 빈곤하여 진정한 정치적 변화가 기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he Radical Renewal: The Politics of Ideas in Modern America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33) The Imperial Temptation: The New World Order and America's Purpose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2)

34) American Empi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학살과 생존권 박탈, 그리고 이들의 정착지역 축소과정을 통해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와 근본주의적 기독교 논리에 따른 선택받은 자들의 사명 의식을 결합시켜 “최일선의 경계선(frontier)”을 끊임없이 자신의 소위 문명권에 통합시켜나가는 “팽창주의”를 지향해왔다. 극단의 인종주의와 선악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학의 근본주의적 배타성을 근거로, 자신을 “선의를 가진 문명”으로, 타자를 “제거해야 할 야만”으로 인식하여 보편적 가치의 방어와 확산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학살과 점령, 지배와 통합을 정당화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팽창주의적 선민의식은 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한 영토점령의 과정에서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³⁵⁾이라는 방식으로 유럽 제국주의의 “백인의 의무적 책임(white man's burden)”을 변형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다. 이보다 앞선 1823년은, 자신의 영향권에 손대지 말라는 식의 개념으로 이후 발전하게 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이 나오면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의 제국의 질서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860년대 북부의 자본주의 세력의 주도권을 확정한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동서를 연결하고 명실상부한 거대한 북 아메리카 제국의 틀을 완료하게 되며, 철강과 금융 등의 분야에서 독점 대자본의 등장과 관련된 팽창주의 정책의 기운은 1898년을 고비로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한 쿠바와 필리핀 점령으로 본격적인 제국주의 정책으로 전환된다. 이 시기 미국은 제국주의 논쟁의 치열한 시기를 거치게 되며, 세계사 속에서 미국의 국가적 진로는 본격적인 제국열강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된다.

1910년대에 이르면 미국은 앞서 언급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의 <함포외교>와 우드로 윌슨의 <달라외교>라는 방식의 전개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질서의 패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철하는 양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닌 것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는 1960년에서 70년대에 이르러 심화되지만, 이미 1921년 스코트 니어링이 쓴 <아메리카 제국(The American Empire³⁶⁾>이나 그가 조세프 프리먼(Joseph Freeman)과 공저한 <달라외교: 아메리카 제국주의에 관한 한 연구(Dollar Diplomacy, A Study in American Imperialism³⁷⁾>같은 연구는 20세기 초반에 이미 그 골격이 완성되다시

35) 미국의 제국주의 대외정책의 기본성격에 대하여 이 명백한 운명의 개념이 멕시코 전쟁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역할을 했는지를 정리한 책으로는 Frederick Merk의 Manifest Destiny and Mission in American Histor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을 참고할 수 있다.

36) The American Empire (New York: The Rand School of Social Science, 1921)

37) Dollar Diplomacy, A Study in American Imperialism (New York: B. W. Huebsch, 1925)

피 한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전략의 구체적인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시 미국의 이른바 “명예로운 외교적 고립주의(glorious isolationism)”가 외쳐졌던 현실과는 달리 미국의 대외정책은 철저하게 독점 대자본의 이해를 관철해나가기 위한 개입주의적 군사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들 대자본의 요구와 외교, 군사정책의 결합이 체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을 좌절시키기 위한 군사적 개입은 이후 반혁명 전략의 기본방침이 된다.

제1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전쟁부채의 채권이 있게 된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주도권을 보다 압도적으로 장악해나가기 시작했고,³⁸⁾ 종말의 단계에 이르렀던 영국 제국주의를 향해 최종의 도전을 시도했던 파시즘 세력에 대한 승리를 통해 제국경영의 세계적 패권을 이양 받게 되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의 경계선을 일정하게 정리한 전후(戰後) 처리의 과정에서 미국은 이른바 자신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에 들어온 지역에서 “(1) 미국의 제국주의적 질서로부터 이탈하려는 민족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체제를 지향하는 좌파세력의 제거, (2) 일부 핵심을 제거한 구 파시스트세력의 복원”이라는 전략으로 제국의 위계질서에 순응하고 그 이해관계를 관철해낼 수 있는 국가권력을 수립하게 된다.³⁹⁾ 이러한 과정은 내부적으로는 좌파세력을 비롯하여 정치적 이견자들에 대한 사회적 숙청을 의미했던 맥카시즘을 통해서 냉전형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세력을 제거하고, 외부적으로는 제3세계 지역의 민족해방전선진압으로 나타난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태로서, 제국 수호의 군사적 성격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요건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1960년대에 미국 사회과학계를 풍미했던 “발전론(Development theory)”은 민주적 근대화론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군사주의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제국의 질서 하위단위를 만드는 작업의 이데올로기적 전략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쟁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수정주의 역사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가진 팽창주의에

38) 1차대전과 2차대전의 사이에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채권국가가 된다. 특히 영국의 경우, 1차대전의 전쟁부채를 미국에게 지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패권의 급속한 약화를 경험하게 된다. Michael Hudson, Super Imperialism, The Economic Strategy of American Empir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2)

39) Gabriel Kolko가 분석한 미국의 전후 대외전략의 기본성격은 따라서, 유럽 내부에 미국 자본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3세계 지역에서는 전쟁시기 동맹세력이었던 민족해방운동세력의 제거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미국의 전후 대외 전략은 한반도의 점령정책에서 그대로 관철된다. The Politics of Wa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3-1945 (New York: Pantheon Books, 1990)

대한 윌리엄 애플만 윌리엄즈(William Appleman Williams)의 지적은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했던 논리에 중대한 도전이었고⁴⁰⁾, 좌파진영의 폴 바란(Paul Baran), 해리 매그도프(Harry Magdoff)⁴¹⁾ 등의 미국 자본주의가 가진 제국주의적 본질에 대한 논란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론적 축을 구성하게 되었다.⁴²⁾ 달라화의 과잉에 따른 문제로 1970년대에 일정한 수세기에 몰렸던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은 자본에 대한 통제를 푸는 방식으로 투기적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오기 시작한 1980년대에⁴³⁾, 레이건의 등장으로 반격의 시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냉전지형이 종료된 이후 그 주도권은 전 지구적 규모의 국제적 협력체제 구성을 통해 제국 동맹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달라 외교의 전통에서 있는 신자유주의 세력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앞서 분석한 것처럼 이들의 주도권도 투기자본의 과잉에 따른 모순의 발생과 이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도전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적 명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다 노골적인 군사주의 정책을 위주로 한 제국 질서의 선택으로 전략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간략히 재정리해보자면,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발생은 이미 미국의 국가건설 초기에서부터 그 맹아(萌芽)가 시작되었으며, 독점 대자본의 주도로 인한 자본주의

40) 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A Delta Book, 1962) 이 책을 통해 윌리엄 애플만 윌리엄즈는 미국이 다른 나라가 자신의 국가적 운명을 스스로의 손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개입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선의를 가진 제국"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적 원칙을 명분으로 한 제국주의적 개입정책과 팽창전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논의로 수정주의 역사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41) Paul Baran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동맹체제가 제3세계에 이식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결국 이들 중심 국가의 독점 대자본의 이해에 봉사하는 것일 뿐, 사실은 이들 국가의 경제적 성장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할 뿐이라는 주장으로 제국주의 정치경제학의 위선과 착취를 입증해나갔다.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ew York: Monthly Review, 1957) 이러한 그의 인식은 Harry Magdoff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끼쳐, 미국의 대외정책 속에 담긴 제국주의적 본질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에 공헌했다. The Age of Imperialism: The Economics of US Foreign Policy (New York: Monthly Review, 1969)

42) 이 시기 제국주의 논쟁에 있어서 Pierre Jalee의 저작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The Pillage of the Third World, (New York: Monthly Review, 1968), Imperialism in the Seventies, (New York: The Third Press, 1973),

43) 달라화 과잉에 따른 금태환 장치가 작동을 멈춘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의 통제장치는 힘을 잃게 되었고 이후 이들 달라화는 투기 자본화하여 새로운 자본시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Eric Helleiner, States and the Reemergence of Global Finance: From Bretton Woods to the 1990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이 과잉 달라는 중동지역의 무기시장 확대로 일정부분 흡수되었고 그 결과 중동지역은 세계적 중무장 지대로 변화했으며, 레이건의 군사주의 노선과 맞물려 이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팔레비 체제를 무너뜨린 이란 혁명은 그러한 과정에서의 산물이었다. 오늘날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체제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자신이 만든 문제를 끌어안고 대처하는 형국이라고 하겠다.

체제 구축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지배권 완결을 넘어 팽창주의적 방식으로 세계전체를 향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의 지배계급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 등의 부르주아 공화정의 가치를 내세워 팽창적 개입주의를 대중적으로 신념화했으며⁴⁴⁾, 실상은 지구 제국의 질서를 구현하는 행태를 꾸준히 지속해왔던 것이다. 미국의 지난 역사의 진로를 되돌아해보면 특히 1898년을 고비로 하여 이러한 침략적 대외 팽창정책이 중단된 적이 없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제국경영 방식은 오늘날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라크 침략 전쟁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내외적 도전의 양상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4. 제국의 지배에 대한 도전과 평화운동의 전략

(1) 제국에 대한 도전

부시정권이 이끄는 아메리카 제국의 지배에 대한 도전은 내부적으로는 (1) 부시정권의 전쟁 논리가 거짓에 기초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전쟁정책의 정통성이 안으로부터 붕괴되어가고 있으며 (2) 이라크 점령정책의 과정에서 이라크 민중들의 반격과 저항이 거세어지고, 이에 따라 미군들의 희생이 늘어가자 전쟁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에서 우선 기인 한다⁴⁵⁾.

이는 모두 이라크 침략 전쟁의 실상에 대한 거짓 정보의 확산과 오도에 따른 결과로서, 새로운 전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증거 부재 또는 증거 조작이라는 방식에 의존한 전쟁수행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부시 대통령 진영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부시정권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허물고 점령정책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라크 침략 전쟁이 군사적 개입에 대한 여론의 제동장치로 기능했던 이른바 <베트남 증후군

44) William Appleman Williams는 미국 대중들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하나의 신념체계처럼 되어 있는 상황을 주시했는데, 그의 논지는 미국 정치와 사회가 자신의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자기인식이 명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45) 시사주간지 TIME은 2003년 7월, 2주 연속해서 이라크 상황과 관련한 부시정권의 딜레마를 다루었다. 7월 14일 판은 "Peace is Hell" 이라는 제목으로 이라크 점령정책에 대한 이라크 민중들의 거센 저항과 미군의 희생, 7월 21일자에는 "Untruth & Consequences"라는 제목 아래 이라크 침공 명분에 대한 공개적 거짓과 정보, 증거 조작시비에 휘말린 부시정권의 곤경을 집중 조명했다. 전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떨어지고, 합법적 정당성의 근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Vietnam's syndrome)⁴⁶⁾을 극복한 경우라고 생각했으나, 현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유럽 동맹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보다 깊어졌고,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배점령정책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으며⁴⁷⁾ 세계적인 반전평화 운동이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탈출구로 미국은 위험부담이 높은 단독적 행위를 보강할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추구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조직의 기능을 보다 인정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대한 반체제 운동의 흐름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행태를 겨냥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황을 조성해가고 있다. 세계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통제하고자 했던 전략이 거꾸로 세계적 규제대상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국에 대한 이러한 규제 장치의 힘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으나 그 가능성의 문은 보다 크게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성찰해보면, 지구촌을 분할했던 제국주의 초기 단계는 러시아 혁명에 의해 도전받았으며 이후는 사회주의 국제 연대라는 틀에서 그 흐름이 반격 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격은 전쟁을 막는데 실패하고 만다. 파시즘의 등장을 자본주의 위기의 수세적 국면으로만 파악한 인식의 착오⁴⁸⁾와 공격적 애국주의의 확산에 따른 결과였다. 2차대전 이후 아메리카 제국주의 질서는 민족해방전선의 저

46) 부시정권 1기와 2기의 군사주의 노선의 틀을 만든 레이건 시기의 대외정책은 바로 이 베트남 중후군 극복을 위한 개입주의 전략의 재개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속배치군(Rapid Deployment Force)의 구상이 현실화되어가고 이후 미국의 군사력 재편에 필요한 기본발상이 형성되어가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Michael T. Klare Beyond the "Vietnam Syndrome": U.S. Interventionism in the 1980s, (Washington D.C.: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982)

47) 중동지역에서의 반미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 해결의 주도권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처지이다. 아랍진영에서 미국의 역할을 "정직하지 못한 중재자(dishonest broker)"로 인식하는 한, 미국의 딜레마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 Naseer H. Aruri, Dishonest Broker: The US Role in Israel and Palestine (Cambridge: South End Press, 2003) 우리의 상황에서는 미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위기를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상 중동지역에서도 미국의 역할은 바로 그런 위기의 주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다.

48) R. Palme Dutt, World Politics, 1918-1936 (London: Victor Gollancz Ltd., 1936) 1936년에 나온 이 저작은 스탈린의 대외정책을 옹호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나, 독일 파시즘에 의한 전쟁 발발을 정확히 예견했고, 당시 세계정세의 흐름 속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전쟁을 막아 내지 못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내리고 있다. 이 저작은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주의 체제의 선택이 전쟁의 조건을 추가해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저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향에 놓이게 되었고⁴⁹⁾, 오늘날은 반세계화 운동의 전면적 확대와 이에 기초한 반전평화 운동의 세계적 연대를 통해서 전환의 고비를 맞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의 반전평화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에 대한 대중 교육의 확산, 반전평화세력의 정치적/사회적 결집,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적 연대의 강화발전,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세계의 구상을 펼쳐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반세기에 이어 또 다른 반세기가 제국의 지배 아래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적 통합 방식인 제국의 세계지배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이로부터 이탈하여 세계적 연대의 기초 위에 새로운 평화 프로젝트를 관철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2) 한반도, 그 새로운 세계사적 역할, 그리고 우리의 해법

한반도는 지난 50년간의 정전협정체제를 통해서 전쟁체제의 일상화를 경험해왔고, 미국의 제국지배전략의 하위 단위라는 자주권 상실의 국가적 지위를 강요당해왔다. 지난 냉전 시기의 군사주의 체제가 한반도의 현대사를 장악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제국경영방식의 소산이었다. 그 결과로 우리의 기본 인권과 민족적 생존권, 외교적 주체성, 민족 내부의 평화적 결합, 사회경제적 정의 등의 사안은 정면으로 제기하여 이를 우리 민족 전체의 당연한 권리로 내세우기 어려웠다. 모든 것은 제국의 질서 내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그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스스로의 안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것이다. "반미(反美)운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 질서 안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생존을 위기에 몰아가는 사태가 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은 여타 지역의 민족들의 생존권을 주변화하고 있으며⁵⁰⁾,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어떤 명분을 동원

49) Richard Barnet은 제3세계 민족해방전선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내세운 케네디 정권이 어떻게 군사적 개입주의를 중심으로 이들을 진압시켜나가면서 미국의 제국주의 질서를 형성해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Intervention and Revolution: America's Confrontation with Insurgent Movements Around the World, (New York: A Meridan Book, 1968) 미국의 군사주의적 개입정책은 이렇게 부시정권 이전에 이미 세계지배전략의 틀로서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해왔던 것이다.

50) Edward Said의 표현에 따르면, 이로써 제국의 지배 하에 있는 민족들은 중심국가의 이해에 봉사하며 자신의 삶은 주변화(marginalized)되고 생존의 기본권리는 박탈(dispossession)되어

해서라도 이들을 물리적 폭력의 대상으로 희생시킬 수 있고 자신의 강제적 통합 전략의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을 “공동의 적”으로 몰아 전쟁정책을 정당화하는 반 평화적 본성을 가졌다. 따라서 이러한 질서의 산물인 정전협정체제의 지속은 폭력과 희생을 양산하는 제국의 질서 안에 우리를 종속적으로 묶어두는 장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로부터의 이탈(de-linking)⁵¹⁾을 계획, 세계적 평화역량과 연대하여 평화체제의 새로운 성립을 구상하여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이러한 제국의 질서로부터 완만한 이탈을 기획했던 것이었으며,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그러한 기반 위에서 보다 진보적 이탈을 진행시키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가 되고 있음에 우리의 고뇌가 있다.

오늘날, 한반도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배전략의 중대 고리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요한 자본의 지배를 극복하는 문제, 신보수주의 세력이 강제하고 있는 전쟁의 가능성을 포함한 군사주의 정책을 철폐하는 문제, 그리고 민족적 단합을 저해하는 분열정책과 이를 보조하는 이데올로기적 유산을 소멸시키는 문제 등이 다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독점대자본의 지배체제와 이를 유지하는 군사력의 존재, 그리고 주권국가의 선택을 견제하는 아메리카 제국의 질서와 맞서는 작업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이미 세계적 연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인류 보편의 생명과 자유, 인권과 생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실현해내야 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평화운동은 (1) 아메리카 제국의 독점대자본의 지배를 극복하는 반세계화 운동 (2) 전쟁정책을 앞세운 군사주의 노선에 대한 반전운동⁵²⁾ (3) 민족내부의 결속을 저해하고 대결을 조장하는 내외의 적대정책

가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권리(self-determination)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갈파했다. 이는 지난 50년의 세월 속에서 미국의 전쟁체제에 갇혀 있는 우리 민족의 형편을 그대로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olitics of Dispossession: The Struggle for Palestinian Self-Determination, 1969-1994 (New York: Vintage Books, 1994)

51)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일극적 제국주의의 착취와 폭력에서 벗어나 다극적 세계 (Polycentric World)를 지향하는 이탈의 결단을 촉구한 사미르 아민의 경우, 이탈 이후의 연대라는 보장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의 질서에서 이탈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세력과의 연대와 협력을 동시에 마련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Samir Amin Delinking: Towards a Polycentric World (London: Zed Books, 1990)

52) 군사주의/반군사주의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놓고 사고한 고전적 저작으로는 Karl Liebknecht의 Militarism and Anti-Militarism (Cambridge: River Press, 1973)을 들 수가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군사부문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한 Rosa Luxemburg의 The Accumulation of Capita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3)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Karl Liebknecht의 저작은 젊은 세대들에게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목적으로

을 청산할 민족단결과 공조체제의 확대를 세 축으로 하여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화운동의 면모는 제국의 지배로 인한 세계적 모순이 집약된 결과로서, 이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평화운동은 세계적 시민권을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국의 지배 축을 흔드는 반전평화 운동의 중대한 보부로서, 그리고 새로운 세계적 대안체제의 발상을 할 수 있는 근거지로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적 통합과정을 속성으로 하는 <자본의 제국>⁵³⁾에서 이탈하여, 인류 공동의 생존이 확보되는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기획하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거대 제국의 행동방식을 규제해나가는 일에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은 무엇인가?

1. 우선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관심과 조직적 특징을 가진 <평화운동세력의 결속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작업은 “이론과 정책의 정리”와 “대중운동의 전개” 두 가지 차원이며, 이 역량이 수시로 과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 한반도에서 어떤 위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집결, 정치사회적 힘을 집중적으로/대중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내부에 전쟁 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 내부와 국제사회의 전쟁 통제력과 결합, 세계적 연대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현실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다⁵⁴⁾. 이번 정전 5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대회 조직 결성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매우 중대한 역사적 성과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조직적 성과를 어떻게 대중화해나가고, 이론적, 정책적, 외교적 차원의 영향력으로 진전시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다.

쓰여졌다는 점에서, 반전평화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현실적 논의의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10년대 독일 사민당 내부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논쟁과 이후 파시즘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역사, 그리고 군사주의 문제를 정리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들의 논의는 오늘날 군사주의 체제를 통한 제국의 문제를 해부하는데 참고의 가치가 있다.

53) Ellen Meiksins Wood, Empire of Capital (London: Verso, 2003) 거대한 초국적 독점 자본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미 그 자본주의 시장 내부에 시장의 참여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강제적 원칙과, 그 외부에는 물리적 강요를 통한 통합을 하는 제국의 힘에 맞설 수 있는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54) 지난 6월 평화운동권과 일부 반전평화 주도 정치권의 방미단 결성과 그 활동은 이러한 세계적 연대의 한 틀을 시험적으로 가동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류와 협력을 위한 민간 차원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민족적 화합과 결속의 기운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국제 나가는 노력이 지속,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문화와 경제 부문에서의 비약적 발전이 중요해지는데, 미국 부시정권에 의한 북한에 대한 <악마화 (demonization)> 프로파간다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서이자, 남북 상호 이해에 의한 공동 전략의 수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중대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에 더하여 이러한 흐름이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단계에 이르면 전쟁체제의 정당성과 실질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현재 내외적으로 정치적/사법적/외교적 평가절하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그리고 그 결정적 산물인 6.15 공동선언의 실제적 추진력을 복원시켜나가는 정치사회적 노력과 결합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3.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상 갖는 주한 미군의 역할과 향후 위상, 그리고 한-미-일 삼각 편제의 기본 기능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심화>시켜나가고 이 삼각 편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치루는 희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 확인해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미국의 세계전략상 가장 중요한 기초가 군사전략이며 주한미군은 바로 이 군사전략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관철해나가는 실질적 물리력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논의, 그리고 대중적 인식의 제고(提高) 없이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중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전쟁체제로부터의 이탈은 어렵다. 당장의 이탈은 현실적이지 아니라는 점에서, 장단기적 구상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와 궁극적 철수, 그리고 동북아시아 집단안보체제의 구성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논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4. 국제적인 반세계화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서, 한반도 지역에 미국의 자본이 독점적 지배를 하는 양상을 최대한 저지하고 <새로운 대안체제 논의>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체제 변화의 논의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진보적인 정치경제 논쟁을 발전시켜나가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화를 벗어나 세계적 연관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민족경제체제를 창출해나가는 기반이 된다. 이 기반이 견고해져 가면 갈수록 미국의 군

사주의 노선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해가게 될 것이다.

5. 핵 문제가 고리가 되어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단계가 높은 핵 동작으로 가지 않도록 북한의 최대한의 자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에 의한 북한의 체제보장과 핵 프로그램 폐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괄타결안의 현실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알려나가 지지를 받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노무현 정권이 이러한 구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북한과의 대화 통로가 보다 확대/심화/고차적이 되어가도록 하는 조처들을 내놓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 간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회담의 재개는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 대중적 지지 기반을 넓혀나가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때, 한반도는 전쟁발발의 비극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내는 역동적인 현장으로 변화될 것이며, 고난이 곧 축복이 되는 역사의 비밀을 이로써 우리는 마침내 완성해나가게 될 것이다.

다시 일으켜야 할 반전운동

최일봉 다함께 편집팀

※ 이 글은 우리가 그 동안 이런저런 기회에 발표한 글들을 짜집기한 것이다.

지난 6월 21일 영국 런던에서는 전쟁저지연합(Stop the War Coalition, 이하 연합)의 활동가 대회가 열렸다. 그 대회에는 6백 명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연합의 사무총장 린지 저먼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회의의 규모는 반전 운동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이 점은 영국 전역에서 열린 대중 집회들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집회들에는 수백 명씩 참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쟁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우리 운동도 계속돼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에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탕을 두고 우리는 운동을 계속 구축해야 합니다. 저들[조지 부시 일당]은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화와 정의에 바탕을 둔 우리 자신의 프로젝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은 블레어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점령 중단 및 영국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제2차 민중의회를 8월 30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열린 제1차 민중의회에는 1천5백여 명이 참가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그리고 제2차 인티파다 3주년이 되는 9월 27일에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점령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국제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반전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17~18일에 뉴욕에서는 '전쟁 저지와 인종차별 종식을 위한 즉각 행동'(ANSWER)이 후원한 '전쟁, 식민지 점령,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국 대회'가 열렸다. 미국 전역과 몇몇 나라에서 온 반전 활동가 8백50여 명이 참가한 그 대회에서는 이라크 점령, 부시 정부의 계획, 반전

운동의 방향 등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와 워크숍 등이 진행됐다. 또, 앞으로 전개할 반전 행동 계획도 논의했는데, 역시 9월 27일을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서 한국과 필리핀까지, 점령과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시위의 날"로 결정했다.

미국의 또 다른 반전 운동 단체 '평화와 정의를 위한 단결'(UFPJ: United For Peace and Justice)도 6월 6~8일 시카고에서 전국 대회를 열었다. UFPJ 산하 3백50여 개 단체의 대표 5백여 명은 운영위원회를 선출하는 등 조직 구조를 정비하고 향후 행동 계획을 논의했다. 70여 개의 행동 계획이 제안됐는데, 그 가운데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도 포함돼 있다.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연대포럼'에 참가한 일본 한국 영국 미국의 반전 단체들도 도쿄선언을 채택하고, 9월 27일 '반전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미국은 지금 이라크에서 "수령"에 빠져들고 있다. "대량 살상 무기"는 한갓 핑계였을 뿐,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석유와 미국의 패권이었음이 밝히 드러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5월 1일 조지 W 부시는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날 이후 이라크에서 평균 하루 한 명꼴로 미군 병사가 죽어 가고 있다. 미군 사상자 비율은 점령 전 주요 전투 기간의 비율을 능가한다. 물론 이라크인 저항자들의 인명 피해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리카르도 산체스조차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세계적인 언론인 로버트 피스크도 "미국의 이라크 '해방' 전쟁은 끝났을지라도 미국에 맞선 이라크인들의 해방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¹⁾ 하고 말했다. 5월 초에 <인디펜던트> 지는 "반미 시위가 증대하고 있고, 사병들에 대한 공격이 체계적이고 일상화해 가고 있는 듯하다."고 보도했다.

주류 언론은 저항하는 이라크인들이 후세인 잔당이라는 미국 정부와 미국 주류

1) 로버트 피스크 인터뷰, "이라크인의 해방전쟁은 곧 시작될 것이다", 《창작과 비평》 120호 (2003년 여름), 331-351쪽.

언론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으나, 후세인 잔당들은 오히려 미군정에 빌붙어 봉사하고 있다. 후세인의 바트당 정권 시절 군 장성과 고위 경찰 관료였던 자들이 사마라 나자프 티크리트 발라드 바쿠바 등 십여 개 도시의 시장 노릇을 하고 있다. 적어도 2천 명의 바트 당원 경찰이 바그다드의 거리로 돌아와 활개를 치고 있다. 영국 국방부 장관 제프 훈은 “바트 당은 넘겨받을 만한 행정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을 공격하는 이라크인들은 또한 후세인 정권의 기반이라던 수니파 무슬림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6월 24일 영국군 병사 6명이 살해당한 곳은 이라크 남부의 마자르 알-카비르였다. 그 곳은 후세인에 의해 억압당하던 시아파 무슬림들의 거주 지역이었다. 6월 26일에는 시아파의 성지인 나자프에서 미군 해병대원 한 명이 살해당했다.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듯이, 수니파와 시아파를 가리지 않고 이라크인들은 미군을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여기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거센 저항에 직면한 미군은 점차 겁을 먹고 있다. 지난 6월 27일에는 자기 집 지붕 위에서 AK-47 소총을 갖고 놀고 있던 11세 소년을 살해하기도 했다.

미군은 무장 저항 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며 6월 29일부터 7일 동안 “방울뱀 작전”을 폈다. 그래서 이라크인 30명을 죽이고 2백82명을 체포했다.

게다가 아직도 이라크의 많은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이나 전기, 식량을 구할 수 없다. 전기 생산은 한 달 전보다 더 감소했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 UN에 따르면, 전쟁 전에는 이라크 인구 2천7백만 명의 60퍼센트가 원조 식량에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원조 식량에 의존하고 있다.

인명 피해도 더 늘어날 것이다. 최근 나온 유니세프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질병과 불발탄 때문에 이라크 어린이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전쟁으로 이라크 의료 체계가 붕괴했기 때문에, 5세 미만 어린이 약 4백20만 명이 소아마비 과상풍 홍역 결핵 같은 예방 가능한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군의 오만함과 잔인함뿐 아니라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도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더욱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6월 29일, 식민지 총독에 해당하는 이라크 최고행정관 폴 브레머는 이렇게 말했다. “이라크 재건 작업이 지독하게 어렵다. ... 미국의 이라크 재건 과정은 부시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임무임이 드러났다.” 점령에는 “오랜 시간

과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부대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7월 2일 러시아 합참 제1차장 유리 발루예프스키는 “현재 이라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장 저항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면서 이라크는 미국에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미군 고위 장성도 이라크 점령을 미국이 베트남에서 빠진 “수렁”에 비유한 바 있다.

이라크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국면이 바뀌었을 뿐이다. ‘점령과 식민주의 대(對) 그에 맞선 항전’이라는 새 국면으로 말이다. 프러시아의 군사 사상가이자 《전쟁론》의 지은이 칼 폰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일 뿐”이라고 했듯이, 점령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다.

이렇게 볼 때, 전쟁에 반대했던 평화주의자들 중 일부가 미군의 철수는 이라크에 권력의 공백과 혼돈을 남겨 놓을 것이라며 미 영 군대 주둔을 지지하는 것은 안타깝다. 가령 훌륭한 저작 《전쟁에 반대한다》(산해출판사)의 지은이 밀란 레이가 창립한 평화 운동 단체 ‘광야의 소리’는 주요 전투 기간 내내 바그다드에 인간 방패를 주재시켜 놓는 등 열정적으로 전쟁에 반대했는데, 어이없게도 이런 순진한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교체”하고 이라크에 세우고 있는 정권은 후세인과 그 핵심 측근만 빠진 후세인 정권이다. 제국은 해방하지 않는다. 오직 정복할 뿐이다.

이런 평화주의자들은 또한 UN이 점령(“재건 작업”)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1990년대 내내 지속돼 이라크인 1백만 명 이상을 죽게 한 제재를 부과한 게 바로 UN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미 영 군대만이 아닌 UN 안보리 소속 국가들 모두가 관장하는 점령도 이라크인들 위에 군림하는 외국 군대의 주둔을 강요하는 것이다. UN이든 아니든 식민지 점령은 식민지 점령이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단지 이라크라는 떡의 떡고물을 떼어 받으려고 UN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뿐이다.

정복 전쟁을 반대해 놓고는, (유일한 ‘질서’ 확립 수단이라며) 정복자의 주둔을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군사 행동을 반대해 놓고는, 그 행동의 결과를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미국은 비용 절감과 기동성을 위해 소규모 군대로 효과적인 점령을 해나가야 하는 한편,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격화하고 있으므로, 미군의 신경은 갈수록 예민해지고 더 난폭해지고 있다. 이것은 이라크인들의 적대감을 더 격화시키고 있다.

결국 옛 국가 기구에서 봉사하던 바트 당원들과 수니파 중상층 무슬림들에게 의존해 통치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아파와 하층 계급들은 더욱 반발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점령군을 철수시키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점령의 정치적 경제적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 상황은 부시 정부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지방 점령(1982년 전쟁 이후)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있을 것이다. 자살 폭탄 공격을 서슴지 않는 이슬람주의자들²⁾ 헤즈볼라의 저항에 밀려, 이스라엘 '방위군'은 점차적으로 철수하다가 마침내 완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점령 상황을 배경으로 미국 상원 원내총무 빌 프리스트나 상원 의원 존 매케인 같은 공화당 우익들이 전쟁에 반대했던 일부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인들에게서 사상자가 나오게 하자, 그네들이 재건에 뒤따르는 곳은 일들을 하게 하자, 그리고 미국인들은 신나는 일들만 맡아서 하자.'는 속셈이다. 그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발칸반도에서 해 온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특히 프랑스와 러시아는 공짜로 미국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UN 주재 미국 대사 존 네그로폰테는 후세인이 석유와 식량을 교환하기로 하고 맺었던 계약의 일부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영국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부시의 국가안보 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의 전술을 이렇게 요약했다. "프랑스를 벌주고, 독일을 무시하고, 러시아를 용서하라."

워싱턴의 전쟁광들 중 일부는 이런 "재건" 과정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므로 꼭 두각시 정부를 남겨 둔 채 미국은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군대를 계속 투입하는 베트남 식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전쟁광들은 점령지 이라크를 거점으로 해 중동 전체의 판을 다시 짜려 하고 있다. 시리아나 이란이 다음 타깃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끊은 대신, 이라크와 이스라엘을 잇는 송유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1년 전,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샤울 모파즈는 미국이 이라크를 정복하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해 시리아를 공격하겠다고

2) "이슬람 원리주의"는 서방 매스컴이 즐겨 쓰는 표현이고, 그렇게 묘사되는 당사자들은 이 용어를 싫어한다. 대신에 그들은 "이슬람주의"라는 말을 선호한다.

이스라엘 언론에 약속했다. 그는 이것이 샤론과 월포위츠와 럼스펠드가 합의한 계획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나머지 세계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피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촘스키는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도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³⁾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도 계속된다

한편, 중동의 다른 한 쪽 전쟁터에서는 언뜻 포연이 가시는 것처럼 보인다. 6월 29일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파타가 3개월 휴전을 선언했다. 그러자 7월 2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북부 베이트 하눈과 요르단강 서안의 베들레헴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이런 조처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베이트 하눈과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군이 철수했지만 도로 봉쇄도 풀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내의 직장으로 출근할 수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기 전에 이미 팔레스타인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뒤였다. 베이트 하눈에서 이스라엘군의 무장 불도저들은 수십 채의 주택과 공장을 파괴했고 도로를 파헤쳐 놓았다. 또, 지역 경제의 기초였던 1천 에이커의 감귤 과수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를 복구하려면 10년은 좋을 것일 것이다.

베이트 하눈과 베들레헴에서 철수한 다음 날 이스라엘군은 다시 가자 지구의 주요 도로를 봉쇄했다. 알 아크사 순교자 여단의 대원 한 명이 크파르 다롬의 유대인 정착촌을 로켓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휴전 협정이 깨졌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나 알 아크사 순교자 여단은 그 휴전 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단체이며, 공격을 감행한 그 대원은 이미 이스라엘군에 살해당한 뒤였다.

이런 핑계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가디언>의 크리스 맥그리얼 기자는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의 토지 수십만 평을 몰수했다고 보도했다.

3) "Imperial Ambition: An Interview with Noam Chomsky by David Barsamian", 2003년 5월 18일. <http://www.justresponse.net/ImperialAmbition.html>

예루살렘 북부의 마을들 주변에 위치한 그 토지는 이스라엘군이 베들레헴에서 철수한 바로 그 날 몰수됐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각료 야세르 아베드 라보는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토지 몰수를 감추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 주민은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우리의 토지 4천 에이커[거의 4백 90만 평]를 빼앗아 갔고 우리는 아직도 내쫓기고 있으며, 그래서 1967년에 2만 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1천3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하고 말했다.

이렇게 토지를 몰수하는 목적은 예루살렘 주변의 이스라엘 통제 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예루살렘으로 통합해 대(大)이스라엘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7월 2일 이스라엘 국방장관 샤울 모파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 지구와 베들레헴에서 전투적인 팔레스타인 단체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뒤에야 이스라엘군이 다른 지역들에서 철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한테는 “총애”를 받지만 팔레스타인 민중 속에서는 인기가 없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 마흐무드 압바스는 7월 3일 팔레스타인 투사 일곱 명(그 중 네 명은 파타 조직원들이었다)을 체포했고, 7월 7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살 폭탄 공격을 계획중이던 18세 여성을 체포했다가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미국이 압바스에게 3천만 달러를 지원하려는 목적은 대중 기반이 전혀 없는 그가 이 돈으로 하마스처럼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무장 단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보안군을 확충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팔레스타인의 한 고위 관료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했듯이, “로드맵은 ... 평화를 위한 계획도 아니고 화해를 위한 계획도 아니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야만적인 저항이지 그런 저항을 낳은 [이스라엘의] 점령이 아니라는 생각에 기초해서 ... 팔레스타인 문제를 끝장내려는 것이다.”

세계 반전 운동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반전 운

동이였다. 지난해 9월 28일 40만 명이 참가한 런던 반전 시위가 11월 피렌체 1백만 명 시위로 이어졌고, 올해 1월 포르투 알레그레를 거쳐 2월 15일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1천5백만 명이 참가한 사상 최대의 반전 시위로 발전했다. 그 때부터 4월 12일까지 반전 시위 참가자는 연인원 무려 수천만 명에 이르렀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계인의 다수파였다.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도 역사상 최초로 대중적 반전 운동이 건설돼, 반전 운동가들은 역사를 새로 썼다. 반전 시위 기간에 반전 운동은 5천 명에서 1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고, 국회 앞 파병 반대 시위를 통해 두 차례나 파병안 통과를 좌절시키기도 했다. 지역 수준에서 벌어진 거리 캠페인과 시위도 있었다. 개전일 행동도 있었다.

이 세계 반전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으로부터 성장해 나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은 1999년 11월 말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 항의하는 운동으로서 시작됐다. 그 뒤 세계 주요 도시들을 거칠 때마다 운동은 성장했다. 물론 2001년 7월 제노바에서처럼 엄청난 국가 폭력에 부딪히고 특히 9-11의 여파 속에 휘말리는 등 구사일생의 고비를 넘기곤 했다. 특히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운동이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반대를 전폭 수용했을 때 운동은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곳의 반세계화 운동가들은 세계화가 투자와 무역의 세계화일 뿐 아니라, 군사적 경쟁과 지정학적 지배를 수반한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들은 전쟁이 일시적 일탈이 아님을 이해했다. 세계 자본주의는 국민 국가들로 나뉘어 있고, 각 국가는 빈틈없이 무장하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은 제국주의와 전쟁에도 반대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 덕분에 운동의 저변이 크게 넓어졌다. 그뿐 아니라 운동이 급진화됐다.

운동이 강력했던 나머지 1991년 걸프 전쟁 때는 참전국 수가 28개였던 데 반해, 이번에는 겨우 4개로 줄었다. 당시에는 미국이 유엔의 재가를 얻어 냈으나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 전술에서도 미국과 영국 군대는 이라크 정권 전복을 위해 직접적 공격보다는 포위와 선무(宣撫) 공작에 의존했는데, 이는 반전 여론과 반전 운동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부시 블레어의 두려움을 반영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영국의 경우, 운동이 내각을 뒤흔든 나머지 파병이 불가능할 뻔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돌이켜보건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럼스펠드가 “미국은 혼자서라도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운동이 가장 성공적으로 일어난 나라들(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은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운동 참가가 두드러진 곳이었다. 영국보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좀더 두드러졌다. 이 나라들에서는 노조가 단지 성명서 내고 간부들 수준에서 하루 정도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넘어, 현장 조합원 수준에서도 대중 시위와 심지어 파업에 참가했다.

또한 이 나라들의 반전 운동 연합체는 단지 '상층' 수준에서만 조직되지 않고 기층 수준에서도 조직됐다. 가령 영국의 '전쟁저지연합'은 지역 조직과 지지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있었고 자체의 간부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나라 사이의 차이에 눈을 돌려 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우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으므로, 반전 운동이 당원 수 10만 명인 재건공산당(리폰다찌오네)을 포함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가톨릭 교회 같은 기관들도 영향을 받았다. 영국은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으므로 사정이 달랐다. 영국 반전 운동 내 조직 좌파는 2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 사회주의노동자당 1만 명, 공산당 1천여 명, 노동당 좌파 의원과 좌파 노조 지도자들의 (대부분 조직돼 있지 않다시피 한) 지지자들을 합치면 이 정도 규모이다.

영국의 경우, 동원자 규모와 피동원자 규모의 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막상 전쟁이 시작돼 국수주의적 선전이 몰아칠 때 영국의 반전 운동 규모는 다른 두 나라보다 조금 더 많이 줄어들었다. 영국 '전쟁저지연합'(Stop the War Coalition) 간사 존 리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반전 운동에 비해 영국 반전 운동이 누리지 못한 사회민주주의적 지지를 "사회민주주의적 적자"라고 부른다. 그리고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안한다.

한편, 이들 나라 정권의 성격이 서로 다름으로 말미암아 알맞은 결과가 빚어졌다. 베를루스코니와 아스나르가 우파 지도자인 반면에 블레어는 (우파적이지만) 사회민주주의의 지도자였으므로, 반전 운동에 의해 블레어가 더 불안정을 겪었다. 자신의 기반 일부로부터의 반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주요 참전국이 아니었으므로 국내 반전 운동이 한 번에 1백만 명은커녕 수십만 명도 동원해 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반전 운동이 일어난 것이 개량주의적인 노무현 정부 하에서였고, 그것도 출범 초기였으므로 보수

4) John Rees, "The Conquest of Iraq". <http://www.swp.org.uk/SR/274/SR1.HTM>

정부 하에서보다는 저변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

주로 이것이 거의 80퍼센트에 육박했던 반전 여론과 최대 1만 명 정도였던 실제 반전 시위 규모 사이의 격차를 설명해 주는 요인들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조직 좌파 자체가 최선을 다해 동원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점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교수들을 포함한 무려 2천 명을 이끌고 행진해 그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왔던 것과 한총련이 가장 많이 동원해야 1천 명을 넘지 않았던 것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의 기층 동원이 미흡했던 것도 꼽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흔히 작업장과 경제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정치 투쟁을 삼가려는 경향을 드러내곤 한다. 하지만 어떤 투쟁이든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 노동자들의 참가가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유럽 사회 포럼이 끝난 뒤 1백만 명이 행진했는데, 이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이탈리아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들이었다. 2월 15일 국제 공동 행동의 날에는 로마에만 4~5백만 명이 운집했는데, 다수가 노조원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철도 노동자들은 군수 물자 수송을 거부하는 파업도 벌였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반전 운동 연합체는 노조가 시위 자금을 대주었으므로 우리 나라의 반전 운동 연합체처럼 부채에 허덕일 필요가 없었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반전 연합체 소속 연사가 노조 집회나 위원회 토론회에 초대돼 강연했다. 한편, 각급 노조 조직은 각급 반전 연합체 조직과 그 행사에 대표자들을 파견했다.

이에 비춰 봤을 때, 민주노총이 현장 조합원들의 반전 운동 참가를 적극 조직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국민의 80퍼센트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으니 조합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전 운동 건설 가능성을 보여 준 작업장 사례들(가령 기아차 화성 공장과 공무원노조)도 있다. 사실, 한국의 반전 운동을 이끈 단체들은 대부분 대중 운동을 건설하려는 노력보다 소수의 활동으로 대체해 버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 한국 반전 운동은 기층(작업 현장 수준, 지역 수준, 일반 학생 수준)에서 운동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13일 시청 앞 촛불 집회 규모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 민중의 반미 정서와 행동 의지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세계화의 효과 때문에, 그리고 미

국이 전 세계에서 자행하는 만행과 횡포 때문에 이제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이라크나 팔레스타인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다.

오는 9월 27일 “이라크 팔레스타인 점령 반대 국제 시위”가 “미국의 혈맹” 한국에서도 대규모로 벌어진다면, 부시와 노무현은 꽤 부담스러울 것이다.

9월 27일을 한국과 국제 반전 운동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만들자. 추악하고 야만적인 ‘수퍼파워’를 꺾어버릴 평화와 정의의 ‘수퍼파워’를 건설하자. (<뉴욕 타임스>는 반전 운동을 미국이라는 수퍼파워와 자웅을 겨루는 “또 하나의 수퍼파워”라고 불렀다.)

세계 반전 운동의 쟁점들

반자본주의 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 운동이 반전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금융 투기 반대 단체 ATTAC의 지도자 베르나르 까쌍은 지난해 11월 유럽사회포럼이 반전 “일색”이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들이 제기한 첫째 쟁점은 “반미” 문제이다. 안토니오 네그리와 함께 《제국》을 쓴 마이클 하트는 2월 15일 1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직후에 쓴 <가디안> 지 칼럼에서 “반전 시위들이 갖가지 반미주의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의 지평을 가둔다.”고 주장했다. 반전 운동이 “반미라는 제한적 성격”을 갖는다며 그 의의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경향이 한국의 운동 안에도 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모두 반전 운동은 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석유와 미국 패권을 위한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미국 내 반전 운동의 주장에 환호했다.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다.

둘째 쟁점은 전략과 관계 있다. 《노 로고》(중앙M&B)의 저자이자 자율주의자인 나오미 클라인은 반전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아르헨티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나날의 삶이 전쟁 같은 곳에서 이런 잔혹함[시장 개방과 부채]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도 평화 운동가들이다.” 하고 말함으로써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의 특별한 중요성을 흐려 버린 바 있다. 자율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든, 자기 나름으로 싸우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전 운동은 제국주의의 모순이 누적돼 있는 ‘체제의 약한 고리’에 투쟁

을 집중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적들은 모든 역량과 운명을 걸고 이라크 전쟁에 뛰어들고 있었고 따라서 우리도 힘을 집중해 이 전쟁을 막아야 했다. 거대한 반전 운동에 부딪힌 미국은 전쟁 시기와 전술에서 모두 제약을 받았고, 지금 이라크에서 점령에 반대하는 저항에 직면해 있다.

셋째 쟁점은 일부 국가를 동맹으로 삼거나 UN 같은 국제 기구를 우리 운동이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월튼 벨로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유럽-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아시아 동맹을 건설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정부의 이라크 전쟁 반대는 한결같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시라크는 드골주의자로서 미국에 필적하는 유럽연합의 추축이 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최근에 연금을 둘러싼 대규모 투쟁이 보여 주듯이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데서 시라크는 부시와 완전히 똑같다. 또, 유럽연합의 군대는 결코 더 평화로운 세계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가 계급은 “서로 싸우는 형제들”일 뿐이다. 그들은 약탈물의 몫을 놓고 서로 싸우지만, 그 약탈물이 같은 원천-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묶여 있다.

UN도 마찬가지다.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미국이 UN 안보리 소속 국가들을 협박하거나 뇌물을 먹인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미국은 침략 전쟁을 대의로 포장하기 위해 UN을 이용하곤 했지만, 그것이 거추장스러울 때는 언제든지 무시해 버렸다. 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또는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UN 선언 등에 기대는 것은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정한 길이 아니다.

국내 반전 운동의 쟁점들

편의상 한국 반전 운동의 단계를 셋으로 구분해 이 문제를 설명하려 한다.

2 15 국제 공동 행동의 날까지: 사회단체 또는 민중단체로 부르는 조직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전통적 좌파는 국제주의 시각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이끄는 데 굼뻐다. 그래서 두 여중생 압살 항의 시위 참가자 다수가 이라크로 시

선을 돌릴 때 그것을 반대했다. 한반도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2 15 국제 공동 반전 행동의 날 시위 때까지 전통적 좌파 진영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미국의 전쟁 노력을 저지하는 데서 한국의 운동이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반전 운동을 확신 있게 이끌 수 없다. 국제 호전 동맹에 대해 국제 반전 동맹으로 맞설 때만 전쟁을 저지할 수 있다는 국제적 시야를 갖지 않고는 굳건하게 운동을 이끌 수 없다.

그래서 시민단체들과 국제주의자들이고 일찍이 1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던 '다함께'가 2 15시위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세계적으로 1천5백만 명이 시위한 그 날, 서울에서도 4~5천 명이 동숭동에서 종묘까지 행진했다. 압도 다수가 청년인 시위대는 낡은 민족주의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새 세대였다. 새 운동권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2 15에서 4 2 국회 파병안 통과 항의까지: 새로운 운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옛 좌파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옛 좌파들이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순간 주요 시민단체들(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이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바로 개량주의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주요 시민단체들은 2 15시위가 지나치게 선명한 색조이고, 강경해 보이고, 대중 투쟁 지향성을 보이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던 듯하다. 더구나 개량주의적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주요 시민단체들은 턱나한 집회 같은 비폭력 평화주의 기조에 바탕을 둔 온건한 반전 운동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굳이 1인 시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하는 1인 시위, 몇몇 주요 단체 대표들만의 기자회견, 비상국민회의, 명동성당 앞 평화 캠프, 난민 구호 사업으로의 방향 전환 등으로 이어지는 궤적을 그리게 된다. 이제 반전 운동은 주요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부차적 역할만을 하고 주로 사회단체(민중단체)가 이끄는 모습이 됐다. 이 단계의 운동은 국회 앞 파병 반대 시위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이 때까지 별 큰 문제 없이 성장하는 듯하던 반전 운동은 파병안이 통과되자 시험에 부딪혔다. 국민의 80퍼센트가 전쟁을 반대하는데도 노무현은 국익, 실리,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평화 맞바꾸기 따위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설득해 국민의 30퍼센트쯤을 파병 불가피론으로 돌아서게 했고, 자신의 당 국회의원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청신호를 보냈다.

파병 반대 시위대의 분노가 폭발한 바로 그 순간에 반전 운동 지도부는 시위의 표적을 정부의 당이 아닌 정부 밖의 당(한나라당)으로 돌리려 했다. 사회단체 대다수도 개량주의의 좌파적 형태인 것일까?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파병안 통과 이후: 비록 4월 4일에 일부 대학 학생들이 맹휴를 하고 종로 거리로 나오는 등 반전 운동이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고 전진하고 있었으나, 전황이 급속히 미군에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해, 운동은 고비를 맞는다.

4 12 국제 행동의 날 시청 앞 집회를 며칠 앞두고 주요 시민단체들은 그들이 즐겨 하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반전 운동이 난민 구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얘기를 띄우기 시작한다.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여중생범대위 합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없는 사항인데도 말이다.

다른 한편, 사회단체들은 '한반도 자주 평화로의 전환' 얘기를 <한겨레> 등을 통해 띄운다.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여중생범대위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는 전혀 거론되지도 않은 얘기인데도 말이다.

이처럼 개량주의와 민족주의는 이미 4 12 전에 운동을 청산하려 했다. 하지만 4 12 시청 앞 집회는 5천 명이 참가했다. <한겨레>가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시위단체: 전쟁반대평화실현 공동실천 중단 요구
명분은 예법. 민중연대 시위 등로.

한반도 위기

부시 일당은 "사담 후세인은 영구적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라고 말한다. 럽스펠드 같은 자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빠져나와 다음 표적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목록에는 시리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돼 있다.

부시 정부가 다음 행보에 대한 방침을 굳힌 것은 아직 아니다. 이라크에서 큰 저항에 직면해 있는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점령 비용이 예상보다 클 듯하고, 석유 생산이 적정 수준에 이르려면 5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다음 행보를 둘러싼 미국 권력자들 간의 분열은 이 난제들의 악화와 함께 격화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당면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북 압박을 증대시키면서도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뚜렷한 계획을 확립했다고 말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며칠 전, 전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페리가 가장 우려한 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각 부서에 있는 고위 관리들을 만나 봤지만 그들의 정책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부시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한다. 사태가 한층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부시의 북한 압박은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한미 미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속속 나오고 있는 마약 미사일 수출 차단 계획, 경제 제재 등은 북한을 한층 옥죄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비극일 것이다. 미국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난 뒤 첫 며칠 안에 남한과 북한에서 1백만 명이 죽는다고 한다. 설사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미국의 대북 압박은 아시아에서 정신 나간 군비 경쟁을 이미 부추기고 있고, 이것은 핵무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 위기의 원인은 미국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미국은 핵 폭탄을 실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핵 "선제 공격" 전략을 세워 둔 국가이다. 북한은 원조와 체제 보장 약속을 하면 핵무기를 해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해 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명분일 뿐이다. 옛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북한 '위협'을 명분 삼아 동아시아에서 미군 10만 명 주둔을 유지하고, 일본을 하위 동맹자로서 자신의 날개 아래 묶어 두고, MD(미사일방어) 체제를 건설하고 있다.

한국의 반전 운동은 미국의 대북 적대와 압박을 반대하고 미국의 핵무기와 군사주의를 과녁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이것이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핵무기나 북한 핵무기나 핵무기이긴 마찬가지라는 추상적인 인식은 실천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양비론의 태도를 낳는다. 그리고 실천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와 압박에 반대하는 일을 일관되게 할 수 없게 만든다.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국가 간 군사적 경쟁과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 자체를 제거해야만 한다. 그러기 전까지는 주된 위협과 부차적인 위협을 구별해야 한다. 1만 6백 기(미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와

1~2기(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 수)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좌파 민족주의 조류인 다수 사회 단체들은 미국의 대북 압박 반대를 평화협정 체결로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아 이런 주장은 더 확산될 수도 있다. 전쟁 중단 상태를 50년이나 끌어 왔으니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요구는 매우 자연스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운동의 요구로 내세우는 것은 대중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먼저, 제국주의 하에서 평화협정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협정 체결 문제로 보자면,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미국은 이미 북한에 체제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곧 휴지 조각이 됐다. 북한 외무성은 이라크 전쟁 직후에 낸 성명에서 "미국과는 설사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 하여도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운동은 결국 당국자 간의 협상에 기대게 된다. 협상이 결렬되면 대화를 촉구하고, 대화가 잘 되면 당국자들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식으로 말이다.

이것은 좌파 민족주의가 한반도 위기를 단순히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로 여기고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지키는 것 - 미국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 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과 관계 있다.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게 된 뒤에도 여전히 미국을 반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민족 계열 안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뒤에 좌파 민족주의 일각에서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됐는데도 반미를 계속 주장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2000년에 당시 미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화려한 카드 섹션으로 그녀를 맞았는데, 그 뒤에 이런 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은 것은 강경 우익인 부시 정부의 등장 때문이었던 듯하다.

또한, 좌파 민족주의는 제국주의를 주요 열강들이 독세하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로 보지 않고, 식민주의들의 총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민중이 미국의 전쟁 기도에 반대해 싸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에 대한 반대를 북한 외교에 대한 응원 부대 구실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이다. 실제로, 좌파 민족주의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북한의 군사력(특히 핵 억지력)과 이를

통해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 내는 협상력이라고 본다. 그래서 남한과 미국의 지배자들이 북한과 평화 협정 또는 불가침 협정을 맺으라고 요구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협상이 깨지면 다시 협상을 하라고 요구하는 식의 운동인 셈이다.

이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은 북미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이고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이다.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을 뜻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쯤은 분명해졌을 것이다. 부시 정권 내 신보수주의자들의 전략(“새로운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로 표현된)은 9 11과 관계 없이,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그것은 1990년대 초 냉전이 종식될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에게, 옛 소련에 대한 미국의 승리는 새로운 종류의 위협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뜻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승리의 삼페인을 터뜨리는 한편,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제기탈, 사방에 경쟁자들이 널려 있어. 일본과 독일의 경제력 좀 봐. 러시아는 경제는 망했어도 군사력은 여전히 막강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은 또 어땠구.’ 즉, 미국은 김정일 같은 골목대장이 제기하는 위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미국은 21세기에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강대국들에게 자신의 군사력을 내보이고 싶어하는 것이다. 미국이 후세인과 김정일 등을 악마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건 이 때문이다.

이것(자본주의 열강들 간의 경쟁)이 오늘날 한반도 위기의 근원이다. 자본주의 열강들은 단지 시장과 원자재와 투자 기회를 독점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지배를 위해 군사 외교적으로도 경쟁한다. 이것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북미 간에 이뤄질 수 없음을 보여 줄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가 동아시아 열강들 간의 군사력 경쟁을 통한 더한층의 불안정과 위기로 나아갈 수 있음도 보여 준다.

노동자 조직들은 북미 간 또는 남북한 간 협상에 기대지 말고 아래로부터의 반제 투쟁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반대하는 투쟁의 주도권을 좌파 민족주의 쪽으로 넘겨 버리지 않으려면 그것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국제주의 시각을 갖고 그럴 필요가 있다. 반제 = 민족이라는 잘못된 등식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쟁점에 달려드는 세력이든 회피하는 세력이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물론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이 쟁점 딱 하나에만 동의하면 이 공통점에 바탕해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이 운동을 함께 건설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견은 운동을 건설하는 데 장애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를 “자주”의 원칙에서 바라봐야 한다든가, 반세계화 운동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등을 함께 운동을 건설할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기구들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오라는 식으로 한다면, 운동을 단결시키기 보다는 분열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공동 행동을 해야 하므로 서로 이견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공동행동을 건설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주장을 숨김 없이 드러내야 한다. 물론 여러 단체들 또는 개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활동을 할 때 이견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밀접히 협력하는 관계가 해체되면 이견을 드러내기는 더 쉽지 않게 된다. 신뢰를 갖고 함께 활동을 할 때 서로의 의견에 귀기울이게 되는 법이다.

▶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은 정치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경제적 목적도 갖고 있다. 그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경제 모델은 미국식 자유 시장 자본주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다음 번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다면(대상은 이란이나 시리아가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될 수도 있고, 남미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 목적은 바로 이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막는 것에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

요컨대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6월 30일에 WTO 반대 투쟁(서울), 9월에 WTO 5차 각료회의 반대 투쟁(칸쿰), 내년 1월에 인도에서 제4차 세계사회포럼이 있을 예정이다. 사회단체들은 WTO 5차 각료회의 반대 투쟁이 서울에서도 대규모로 벌어질 수 있도록 공동 행동을 모색하고, 세계사회포럼의 대규모 참가단 구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자본주의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의 심장인 이윤의 유일한 창조자이자 유일한 파괴자인 노동 계급을 변화의 주체로 삼지 않아서도 안 된다.

이런 원칙들 위에서 남한의 반전 평화 운동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반대하는 운동과 나란히 미국의 대북 적대와 압박에 반대하는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영국과 미국의 반전 운동 단체들이 제안한 9월 27일 국제 반전 행동을 한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추진하자.

제2세션

한반도 쉬기, 평화운동은 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주제1 : 이라크 전쟁이후 반전 반세계화 운동

현 시기 반제, 반미, 반전의 성격과 투쟁방향

고민택 노동자의 힘 중앙위원

오늘날의 반제국주의의 의미와 성격

20세기 초반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성격을 제국주의로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조차 논란과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오늘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성격을 제국주의로 규정짓고자 할 때에는 훨씬 많은 문제제기가 던져지고 있다.

여기서 일단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국주의는 크게 두 측면의 통일로서 이해되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 측면으로, 이 때 제국주의란 (국가) 독점자본주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독점자본주의에서는 산업(독점)자본과 은행(독점)자본이 유착 융합한 형태의 금융자본이 성립 등장함으로써 금융과두제의 지배가 나타난다. 동시에 독점자본주의에서는 독점가격에 따르는 자본의 초과 이윤 발생과 과잉자본이 형성된다. 이로부터 이전 시기의 상품수출과 대비되는 '자본수출'을 필연화한다. 또 하나는 정치적 측면인데, 이 때의 제국주의는 특정 국가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 성격은 국가가 독점자본주의의 국내적 지배와 대외적 팽창을 지원 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계시장에서 국제 독점체 사이의 경제적 분할 경쟁과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영토적 분할 경쟁을 국가가 지원 선도하고, 나아가 이의 재분할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사적 경쟁, 즉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렇게 본다면 제국주의는 민족국가가 도달한 자본의 발전(축적) 단계와 그를 유지 지속 강화시키고자 하는 상부구조(국가)의 역할을 합한(통일시킨) 개념이 된다.

그런데 노동계급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든 오늘의 세계에 대해서든, 그것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극

복하려는 데 있다. 즉 '이행'을 위한 실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답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제국주의(론)는 과연 '과학인가'라는 의문과 오늘날에도 실천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 특히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의(마지막) 단계이자 사멸하는 단계로 규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로부터 다름 아닌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것도 항상적 일반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자본주의 '붕괴론'으로까지 독해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위기의 성격을 자본운동 내재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 입장에서, 제국주의는 이미 낡은 것이 된다. 이 때문에 과거의 제국주의론으로는, 오늘의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설명할 수 없거나 최소한 어려워, 그것은 특정 시기(만)의 전술 실천을 위한 일종의 방법론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다.

사실 제국주의(론)에 따른 현상은 러시아 이후의 역사에서 재등장하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두 번의 세계대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라진 것은 오히려 '현실사회주의'이다. 신식민지라는 개념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식민지는 분명 축소되었다. 오늘날 자본수출은 자본유치 경쟁과 함께 가고 있으며, 이는 선진자본주의(제국주의)조차 예외가 아니다. 세계자본주의 질서는 WTO 체제, 블록화(EU, FTA 등), 국경을 넘는 자본간 제휴 합병, 초국적 자본의 등장 등으로 인해, 그것들이 비록 자본간 국가간 경쟁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과 타협, 즉 조절이 가능한 듯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특정 성격, 즉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금융세계화가 문제이며, 국가 또는 제국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또는 제국주의의 특정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민주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역사상 가장 낮거나 심지어 사라졌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미국 제국주의의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 침공 침략일 뿐이라는 인식과 진단이 '좌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반제국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성격은 어떤 것인가? 보다 직접적으로 왜 반제국주의를 제기하고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는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여전히 제국주의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것

이 과학으로든 실천적으로든 유효 타당한가라는 측면이다. 결론은 그렇다. 특히 자본주의가 지금 항상적 일반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제국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위에서 말한 제국주의의 여섯 가지 특징 또는 표지는 그 후의 세계에서 변화해왔으며, 변화했다. 문제는 그 변화가 과연 자본주의가 항상적 일반적 위기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 일진대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의 자본주의가 도달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지구화, 금융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비록 유의해서 독해해야 하지만 지배계급에서조차 오늘의 세계를 이른바 '경제 전쟁' 시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경제 전쟁'은 일상적으로는 끝없는 '군비 경쟁'을, 최종적으로는 '진짜 전쟁' 이외에는 달리 도달 할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둘째는 반제국주의의 상대 개념 또는 지향이 무엇인가이다. 여기가 20세기 초의 반제국주의에 비해 오늘날의 반제국주의가 보다 확장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가장 반동적인 것으로는 스스로 제국주의 국가가 되자는 이데올로기이다. 예컨대 '국가 경쟁력 강화', '선진국 진입', '2만 달러 시대', '동북아중심국가건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라면 자유주의 세력 및 노동자 민중 진영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권국가', '자주국가', '민족자존' 등은 비록 전술적 측면에서 수용 할 바가 없지 않지만 그것들이 노자관계를 배제하거나 등한시한다면, 또는 시간적 선후 문제나 중심과 부차의 문제에서 노자관계를 뒤로 돌린다면 그 역시 오늘날의 반제국주의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반제국주의의 상대 개념 또는 지향은 '반자본', '노자관계 지양', '이행'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반제국주의는 바로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셋째는 반제국주의 투쟁의 구체적 대상과 실천 프로그램 문제이다. 여기에서도 20세기 초의 반제국주의 투쟁과 오늘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구체성이 달라진다. 위에서 말한 반제국주의가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반자본', '노자관계 지양', '이행'은, 자본이 '민족국가'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 원칙적으로 일국(내)에서의 투쟁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바로 자본운동이 일국적 또는 민족국가 단위로 폐쇄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것 때문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자본'에 대한 투쟁이 일국 내로 제한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응, 타국 노동계급의 투쟁에 대한 연대, 타국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적 개입에 대한 반대, 자본(운동)

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제도나 규약, 즉 WTO 체제, FTA, IMF, OECD, G8, 투자협정, 경제특구 등에 대한 반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일국(내)에서의 투쟁과 이러한 투쟁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천 프로그램도 그리 어렵거나 추상적이지 않다. 이 두 투쟁은 상당 부분 중복 중첩되어 있다. 다만 지리(공간)적 시간적으로 투쟁의 성격이나 대상이 보다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은 물론 전통적인 임금인상, 단협쟁취,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활동보장 투쟁 등은 각국의 구체적 조건에 따른 구체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WTO 각료회의, IMF 총회, G8 회담 등이 열리는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투쟁에의 참여나, 반전을 주제로 한 집회나 시위의 개최 등은 전지구적, 지역적 동시성을 띠고 있다.

반미?

반미는 오늘의 세계,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만큼 미국, 정확히는 미국 제국주의, 더 구체적으로는 부시 정권이 세계 및 특히 한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점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 및 한국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실제로는 약화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역사적으로 축소되어왔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이토록 부각되고 있는 것은, 멀리는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군사강국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과 가까이는 9 11 사태 이후 부시 정권이 취하고 있는 행보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회와 관련해서는 '북 핵' - 이영희 선생의 지적에 따르면 '미국의 제네바 합의 불이행' -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전세계 노동자 민중이 미국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마땅하다. 그런데 왜 반미가 문제인가? 아니 한국사회 노동자 민중진영 일부에서 반미를 왜 문제삼고 있는가?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반미를 국가 대 국가의 대립과 갈등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대이다. 이럴 경우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국내 지배 피지배 관계, 즉 노자관계가 은폐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둘째 한국사회에 실체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반미주의자', 즉 '민족주의 정치 세력'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띠고 있다. 그들

이 주장하는 반미는 분명 위 첫째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노동자 민중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다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반미는 결국 '친북'으로 귀결되거나 최소한 '북'에 대한 환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의 반대이다. 이 모든 것의 귀결은 결국 노동계급에게 국가주의 또는 애국주의를 심어주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판단이 반미를 문제삼는 배경이다.

이렇다고 할 때 문제는 반미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서 곧 "반미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 옳바르고 타당한가라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이를 검토하는 데에는 몇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반미가 온전히 위에서 말한 배경을 쫓아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한국사회에서 최소한 반미가 소수의 활동가들 사이에서의 문제를 넘어 대중적으로 제기될 수 있게 된 가장 최근의 계기는 '미선 효순의 죽음'이다. 그런데 '미선이 효순이가 죽음을 당한 것' 때문만으로 곧 한국사회에서 반미가 대중화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과거에도 그와 비슷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그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진실은 노자관계가 그 어느 시기보다 그 자체로 투명하게 격화되고 있으며, '민족주의 세력' 내의 한 분파인 '친북' 세력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고, '북'에 대한 환상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미는 오히려 이와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따라서 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미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다. "반미는 안 된다"라는 실천적 결론이 문제일 뿐이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에서 지금 반미가 외쳐질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다. 가장 첫째로는 '북'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즉 '북'의 남침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데 있다. 그 반대로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 그것은 곧 '북'의 존재 또는 '북 핵'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미국, 특히 부시 정권의 태도와 결정 때문일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둘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범은 바로 미국 자본이라는 것을 노동자 민중이, 김대중 정권 등장 이래, 투쟁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는 대중, 즉 노동자 민중의 정치 역량이 최소한 87년 이후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분명 반미는 현 시점에서 뚜렷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이런 현상은, 전사회적 차원에서나 또는 대중적

차원에서는,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나 가능한 일이거나 아니면 일이 이미 벌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깨달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반미는 막연한 감정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원인과 이유가 있는 데 그것은 위에서 말한 바대로 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반미는 안 된다"라는 정치적 결론은 맞지 않다.

또한 정세적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대립 구도는 명백히 '반미'와 '친미'(최소한 '반반미')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전선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반미의 성격이나 의미를 둘러싸고 전선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피지배계급 내부에서도 드러내 놓고 반미를 주장하는 것을 아직은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지배계급이 선동하고 있는 "반미는 안 된다"라는 전선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반미에 동요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을 타격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미는 지금 시점에서 유용하다.

결론적으로 반미에 포함되어 있는 비과학적 인식이나 탈계급적 내용을 문제삼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좀 더 반미가 진전되어야 한다. '민족주의 세력'이 끼치는 정치적 영향력은 "반미는 안 된다"라는 선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미는 공통분모이되, 그 방향은 앞에서 말한 의미에서의 '반제국주의' 나아가 '반자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밀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반미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전 투쟁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선동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인식은 투쟁과 함께, 정세의 변화에 따라 상승 또는 후퇴하는 것이지 고정적이지 않다. 문제는 매 시기 슬로건이나 전술에서 개입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이며,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이다.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물론 이처럼 반미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고통과 고민은 노동계급 또는 변혁 세력이 역사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세력화하는데 실패한 것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를 일시에, 무매개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의 복수는 있으되, 공짜는 없다. 반미에 개입하지 않고 반미의 한계와 약점을 선동할 수는 없는 일이며, 별개의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다.

반전이 고리이다

지금 시기에 반전은 앞에서 반제와 반미를 정치적 계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 또는 고리로 위치되어야 한다. 지난 미국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략을 앞두고 벌어진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반전 투쟁은 세계 노동계급과 민중이 나아가야 할 정치적 방향과 투쟁 방향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다. 미국 지배 언론이 반전 투쟁을 일컬어 '또 하나의 슈퍼 파워'(원래 하나는 미국을 지칭하는 것임)로 지목한 것은 괜한 너스레가 아니다.

1999년 시애틀 투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만 해도 그 투쟁이 이후 갖는 정치적 성격과 파급에 대해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과성으로 그칠지, 하나의 이벤트에 머무르고 말지, 일국 내의 투쟁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시애틀 이후 반세계화 투쟁은 날로 강화되어 갔으며, 세계 노동자 민중 투쟁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경로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것을 그 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면 반전 투쟁은, 물론 최근의 반전 투쟁은 바로 시애틀 이후의 반세계화 투쟁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만, 그 실체가 너무도 명백하고 뚜렷하다. 또 다시 이라크 침략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의 반전 투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사실 쉽게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은 그 실체와 전망이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지난 반전 투쟁에 비해 훨씬 역동적 폭발적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반전 투쟁에도 정치적 계급적 약점이 있다. 예컨대 반전 투쟁이 앞에서 우려한 바와 같은 내용의 반미 투쟁으로 흐르거나, 반미로까지 나아가지도 못한 체 평화운동에서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반전 투쟁을 노동계급이 주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약점은 그대로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는 바로 노동계급이 지금 시기 반전 투쟁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정치적 계급적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한(조선)반도의 현실을 대입하면 반전 투쟁이 갖는 의미는 더욱 증폭된다. 미국이 전 세계 반전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략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의 하나는 바로 이라크 국내 노동계급의 역량이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한(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는 바로 남한 노동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역량 및 투쟁 강도이다. 물론 미국의 세계 전략 및 국제정치 역학과 북의 태도가 훨씬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에도 남한 노동계급이 갖는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동아

시아 정세를 감안할 때 '북핵'을 매개로 또는 '북핵'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재무장 및 노무현 정권이 말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군비 강화) 계획을 볼 때 반전 투쟁이 갖는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반전 투쟁이야말로 오늘의 남한 노동계급이 부여잡아야 할 긴급한 정치 계급 투쟁이다. 반전 투쟁 좌우로 반제, 반미 투쟁을 결합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연대를 형성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권과의 전선을 설치해 나간다면 정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현안 투쟁을 벌이는 데에 있어서도 고지를 점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반전하는 이유(노동자는 왜 전쟁에 반대해야하는가?)

김승호 사이버노동대학

1. 이 전쟁의 목적은 '제국' 건설이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말이 있다. 이 말은 전쟁은 일종의 정치행위로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함축을 지닌다. 그러면 이 말에서 애매하게 표현되고 있는 “다른 수단”이란 무엇인가? 군사적 수단일 터인데, 군사적 수단이란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와 그 무기를 사용하는 인간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상대방의 생명을 유린함으로써 굴복을 받아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체계적인 살인행위인 것이다. 그 살인행위는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제한전의 경우) 강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저강도 전쟁) 어쨌건 전쟁은 이처럼 이러저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을 만큼 숭고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는 아무리 수단의 야만성을 제한하더라도 체계적 살인이라는 이러한 속성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기에 아인슈타인은 “전쟁은 인간화 될 수 있는 게 아니”며, “단지 폐기될 수 있을 뿐”이라고 갈파했다.

1천만 여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2천만 명 이상을 불구자가 되게 한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사람들은 그럴듯한 정치적 목적을 내세워 체계적으로, 근대에 들어와서 더욱 체계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근대성에 대해 회의하고 전쟁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 전후에 발행된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나 라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 이러한 반전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파시즘과의 전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내세워지면서 인

류는 또다시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이게 되고 4천만 명의 인간생명을 유린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행된 인간 존엄성의 파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워드 진은 이와 관련, “아마 제2차 세계대전이 낳은 최악의 결과는 전쟁이 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 존속시켰다는 점일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 나는 전쟁에는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이 있다는 다소 전통적인 생각에서 시각에서 벗어나, 인류의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전쟁은 전혀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하워드 진, ‘전쟁에 반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모든 전쟁에 대해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전쟁이 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외세의 침략과 압제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해방코자 하는 전쟁이 무조건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폭정으로부터의 인민의 해방전쟁이 무조건 부인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워드 진 같은 이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것처럼 전쟁에서 반전 비폭력 운동으로 돌아서는 기나긴 여정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두고 볼 일이다. 어떻게 전쟁 없이, 투쟁해 정의를 쟁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이다. (하워드 진도 “가장 현대적인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 말고 ... 6년간의 전쟁 대신에, 게릴라전, 파업, 비협력 간은, 또는 지하운동, 사보타지, 주요 통신 및 교통시설의 교란 같은, 또는 점점 더 대규모로 반대운동을 조직해 나가는 은밀한 선전 같은, 10년이나 20년 걸리는 저항을 상상해 보려 노력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면서 게릴라전은 인정하고 있다.)

이 지점은 숙제로 남겨 두더라도 사람들이 지금 왜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지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앞에서 예로 든 전쟁들은 조국방위 전쟁,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 파시즘의 야만성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쟁, 또는 민족자결을 위한 전쟁 등 온갖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식민지 쟁탈을 둘러싼 제국주의 상호간의 전쟁이었으므로 그 수단만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었다. 우리가 지금 문제삼고 있는 전쟁 또한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성격의 전쟁이므로 그것의 정당성이 부인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인권, 민주주의, 자유, 해방, 테러근절,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의 온갖 수사를 동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석유를 위해서건 지정학적 패권을 위해서건 아메리카 제국

(Pax Americana) 완성, 신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침략전쟁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2. 전쟁은 야만의 극치이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전쟁이 거부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이 극히 부당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그 수단이 극히 야만적이기 때문이다. 제1차 걸프전 말미에 이라크 군인들을 사막에서 말 그대로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장면은 전쟁이 동반하는 대량살육의 야만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관련, 제2차 세계대전의 일환인 태평양전쟁과 4백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천만 여명의 이산가족을 낳은 ‘한국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참화와 비극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전쟁상태는 휴전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 그 야만성에 대한 고발은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평화에 대한 여성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는 우선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파괴적인 자원낭비에 대한 여성들의 비극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은 남녀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안겨준다. 남자는 전쟁터에서, 여성은 후방에서 전쟁의 희생자가 된다. 최근의 전쟁에서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여성과 어린이들 중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력갈등 시, 여성들은 사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다.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은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성 때문에 무력갈등 시 무차별적인 성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강간, 강제임신, 강제불임, 강제매춘, 성적 노예제(위안부), 온갖 형태의 성적 고문과 성적 모욕으로 여성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공격을 받는다. 여성들은 전쟁 중에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가족들(자녀, 노인, 약자, 부상자)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 전쟁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이 모두 파괴되거나 모든 물자가 전쟁터로 가버리고 나면 여성들은 굶주리는 가족들을 먹이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들이 전사하고 나면, 여성의 지위와 안전이 전적으로 남성에게 달려 있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달리 생계수단이 없는 과부 또는 여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과 부양가족의 고통을 일생 지고 살아야 한다.”

“전쟁은 또한 생산과 인간의 복지에 사용해야 할 엄청난 자원을 파괴적으로 소모한다. 평화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세계 빈곤의 더 큰 짐을 지고 기본생계와 안전을 위협받으며 삶을 꾸려가는데 전쟁 준비와 전쟁에 쓰는 경비의 일부분만 사용해도 이들은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다. 아직도 무력갈등, 긴장, 적대감, 그리고 위협이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국들로 하여금 더 파괴적이고 더 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비로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도록 만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과학자와 기술자의 40% 이상이 파괴적인 무기와 그 지원 기술 조직을 위해 일해 왔다. 이와 같이 막대한 세계자원이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기보다 생명을 파괴하는 활동으로 소모되고 있다.”(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이현숙, ‘여성과 평화운동’)

3. 전쟁은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와 사람들 즉 인간의 보편적 이해관계가 따로 노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는 노동력 상품의 소유·판매자이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인간의 보편적 해방이 실현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인간의 보편적인 해방을 위해 그 선두에서 싸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전쟁과 폭력의 야만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있어서도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임금은 소외된 노동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소외된 노동은 사적 소유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한편이 붕괴되면 다른 편도 붕괴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사적 소유에 대한 소외된 노동의 관계로부터, 사적 소유 등등으로부터의, 노예제로부터의 사회의 해방은 노동자 해방이라는 정치적 해방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지만 그러한 표현은 마치 노동자의 해방만이 중요한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해방 속에 보편적인 인간해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해방 속에 보편적 인간해방이 들어 있는 이유는 인간의 노예제 전체가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모든 노예제 관계가 이 관계의 변용들과 귀결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이러한 추상적 수준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계급이 이 전쟁에 반대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대해 네오콘의 하나인 윌시(전 미 중앙정보국장)는 ‘제4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실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봉쇄, 반격하기 위한 냉전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보면서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전지구적 지배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전쟁의 목적은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확대, 강화에 있는 만큼 그 목적이 관철될 경우 세계 노동자 계급이 더욱 심한 노예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지점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를 받게되는 약소국들의 노동자가 더욱 가혹한 노예상태에 처하게 되겠지만 제국주의 모국의 노동자계급이라고 하여 노예상태가 완화되는 것도 아니다. 제국주의 모국 노동자의 경우에도 전쟁상황에서는 세금은 늘어나고 물가는 앙등하는 반면 정부의 사회보장예산이 삭감과 임금억제를 통한 착취율의 제고가 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계급은 이 전쟁에 반대해야 할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로, 전쟁상황이 조성되면 민중의 민주적 재권리, 특히 노동자의 계급투쟁의 권리가 심하게 제약된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전쟁은 대내적으로 파시즘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가진다. “전쟁이 낳는 한 가지 분명한 결과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애국심은 시대의 명령이 되고, 전쟁에 의문을 품는 이들은 반역자가 되어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투옥된다.” 파시즘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시체제가 선포되고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었으며 노동자의 파업권이 유보되었다. 더불어 군수산업과 같이 전쟁을 선호하는, 독점자본 안에서도 가장 반동적인 분파들이 득세하고 이들이 미디어자본들과 한패가 되어 맹목적 애국주의와 폭력을 찬양·고무함으로써 사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오른쪽으로 몰아간다. 그에 따라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주적·진보적 세력들의 영향력은 크게 위축된다. 이러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형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 동안 지속된다. 냉전이 매카시즘을 가져왔던 데서 이런 경향은 잘 확인된다.

셋째, 전투에 동원되고 희생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 계급이다. 또한 상대측의 공격으로부터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노동자 계급이다. 전투에 동원되는 병력은 모병제의 경우 직업군인으로서 노동자이다. 징집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노동자계급에서 충원된다. 자본의 탐욕을 위해 노동자가 자원으로 소모되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전쟁은 총력전이다. 민간인이라고 하여 공격에서 면제되지 않

는다. 이 때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반면 노동자계급은 거주지에서 무차별 폭격을 받아 대량살상된다. 전쟁으로 희생되고 고통받는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또한 대부분 노동자 계급의 여성과 어린이 및 노약자들이다.

넷째, 전쟁은 국토와 자연환경 및 공동체 만든 시설을 파괴하고 황폐화시킨다. 이 시설들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이든 그것의 실질적인 주인은 노동자와 민중이다. 이러한 것들의 파괴와 황폐화는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황폐화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을 복구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노동자계급은 최소한 수십 년 길게는 세기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 전쟁은 이러한 짐과 고통을 당대의 노동자계급이 지는 것은 물론 후대의 노동자계급에까지 물려주게 된다. 후대의 노동자계급에게 그런 짐을 지고서 계급지배에서 해방되는 일을 빨리 달성하라고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계급해방의 진전은 해방을 위한 물질적 조건의 확보와 맞물려 있으므로 이다.

끝으로, 전쟁은 노동자계급 자신에게도 폭력의 문화를 감염시킨다. 비근한 예로 군생활을 경험한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폭력에 친화적이고 반폭력에 둔감하다. 군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비하면 여타의 폭력은 사소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전쟁을 경험할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폭력의 문화는 계급적, 인종적, 성적, 지역적 등 각종의 지배와 차별 및 억압에 대한 비판의식, 저항의식을 약화시키고 인적자원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해방되고자 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신을 타락시킨다. 자본주의는 시초축적에서 보듯이 태생적으로 전쟁 및 폭력과 친화적이다. 자본의 지배에서 해방되고자 한다면 노동자는 자본의 이러한 속성과 단호히 절연해야 하고 비타협적으로 폭력 및 그러한 폭력의 극단화된 형태인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 (“ ‘이러한 이해들’ 즉 경제적 이해들은 자유롭게 방임되어 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상호 충돌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 그것들은 전쟁 이외의 다른 어떤 중재재판관도 갖고 있지 않으며 전쟁의 판결은 한쪽에는 패배와 죽음을, 다른 한쪽에는 승리를 준다. ... 대립하는 힘들의 이와 같은 충돌 속에서 과학은 질서와 균형을 모색한다 ; 과학의 견해에 따르면 항구적인 전쟁이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이다 ; 이러한 전쟁은 경쟁이라 불린다.” ‘경제학 철학 초고 중에서.’)

평화운동과 통일운동 - 쟁점과 과제

정대연 민중연대

1. 들어가며

미국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이 지구촌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최근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한국에서도 반전평화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의 원인과 전망, 해법을 놓고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평화)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에는 크게 보아 1) 북미사이의 적대적 대결관계 2) 남북관계 3) 한미일사이의 지배와 예속관계, 4) 남측 내부의 계급적 모순관계 등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이른 바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위 네 가지 구조적 관계 속에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2.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과 해법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

1)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근본 원인이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 강압적 대북정책, 위험한 군사주의 정책에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서냉전체제 이후 90년대들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온 국의 21세기 패권전략은 ‘아시아 중시전략’, ‘중국포위전략’이며, 미국은 이를 위해 MD구축, 미일군사동맹의 전략적 강화를 위해 이른 바 북미사이 핵 갈등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부시행정부 들어 속속 구체화되어 왔는데 북을 포함한 ‘핵선제공격전략’의 마련으로 대표되는 북에 대한 핵위협 강화, 북미사이의 핵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경제

제재조치의 해제 등 포괄적 관계개선을 합의한 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 북미공동
커뮤니케이션의 의도적 파괴, 한국과 일본의 MD체제로의 편입, 유사법제 제정 등 일본의
전쟁국가화 지원 등이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일정권 붕괴'에 맞추어 작동하고 있다. 부시행정부
가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표방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북의 '자체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전쟁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4.23 북경회담에서 북이 내놓은 '새롭고 대담한 제안'(북의 핵동결, 미
국의 대북적대정책 폐지와 안전보장의 단계적 동시조치)을 무시하고 선택포기 다자회
담을 강요하며, 해상봉쇄 및 경제봉쇄, 안보리의장성명추진, '탈북자문제'를 활용한 인
권시비 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속속 구체화되고 있는 대북 전쟁계획이다. 1994년 북
한과의 전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미 국방부(펜타곤)는 1996년에 유사 작전계획을
확대하여 김정일 체제의 붕괴 시나리오인 5027-98 작전계획을 마련하였다.

지난 6월 21일자 미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보도한 미 국방
부의 '작전계획 5030'으로 불리는 비밀전쟁 계획은 5027-98을 구체화 한 것으로 북
정권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 저강도전쟁의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2)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 문제에 대하여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입장을 취할 때만
해도 이 문제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의지보다는 '미국으
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아내기 위한 카드'로 인식하거나 확실한 근거도 없는 미국의 공
세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부시정권의 대북압박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북이 4.23 북경회담의 이른 바 '북도대화'를 통해 '핵보유시인발언'을 했다는 미국의
주장이 나오면서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분명
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북이 지난 3월 폐연료봉재처리 작업을 통한 플루토늄
추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 통보하고 7월 8일 '뉴욕채널'을 통해 이를
완료했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최근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안전과 평화를 위한 방법에는 협상방식도 있
고 억지력을 갖는 방식도 있다.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이 이

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억지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3일 로이터 통신은 "북한은 미국이 9월 9일까지 핵 문제와 관련한 자신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핵보유국 선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한
것도 이러한 북한의 일관된 입장과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한반도비핵화 원칙에서 대하고 풀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는 "누구든지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반
입, 제작, 사용, 핵위협에 반대하는 원칙"이라고 할 때 북한의 핵개발의 중단은 미국
의 핵전쟁위협이 제거되는 것과 동시조치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평화운동진영
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핵주권'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핵위협에 대항할 권리"로 해
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중심의 핵독점체제인 NPT체제의 불평등성과 그 것이 낳
는 반평화적 성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미국의 핵위협, 전쟁위협에 핵개발로 맞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호전세력에게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시각인데 이러한 시각이 양비론을 낳고 있
다. 말하자면 북이 "민족의 생존을 불모로 위협천만한 전술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비론은 "부시정권은 클린턴 정권과 달라 북한의 위협전술이 통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전쟁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시각을 배경으로 하
고 있다. 또 북의 핵개발이 국제평화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남한 정부 입지를
축소시킴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전쟁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미국의 대북전쟁위협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북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전쟁
의지와 계획이 철회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항능력이 없을 때 어김없이 전쟁을 감행한
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고 최근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도 입증되었다.

둘째,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제거하는 현실적 방도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시
키고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의 수립을 강제하는 것인데 철저히 힘의 논리로 무장한
미국에 대항하여 '핵카드'를 제외하고 어떠한 다른 수단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94년
전쟁위기의 해소와 제네바합의도 북의 NPT탈퇴라는 초강수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미국이 4.23 북경회담에 응한 것이나 최근 대화재개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도 폐연료봉재처리 강행이라는 북의 공세적 조치가 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

시해야 한다.

셋째, 북의 핵무기 개발 강행이 국제적 여론을 불리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라크 전쟁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국제여론이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나 평화를 보장하는 충분한 조건은 못된다. 자기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서야 국제적 여론도 의미를 갖는다. 남한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평화적 해결노력의 여지를 없앤다는 주장도 있으나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명백히 확인했다시피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남한정부가 전쟁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무모한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작전계획 5027은 한국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루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도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지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를 위한 현실적 무기로 보아야 하며, 우리의 활동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북미불가침 보장, 북의 핵동결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고 대북압박과 전쟁위험을 강행하는 미국에 맞서 싸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최근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반도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중국 다이빙귀 외교부 상무부부장의 방북(7월 12-15)을 계기로 8월에 선 3자 회담 후 다자회담 방식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화 재개 움직임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과 핵전쟁책동이 1차적으로 저지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다.

최근 3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북의 공세적 조치가 그 동력이다.

부시정권의 대북압살정책에 대하여 북은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서는 공세적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의 중유공급중단조치에 맞서 NPT탈퇴효력발효 선언을 한 데 이어 미국이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8천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강행함으로써 4.23북경회담에 미국을 끌어내었다. 북은 4.23 북경회담을 통해 '북의 핵동결과 안전보장 및 봉쇄 해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롭고 대담한 제안'을 내놓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는 '핵억제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북의 입장은 지난 7월 8일 뉴욕체체널을 통한 폐연료봉재처리 완료 통보로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북의 빠르고 강력한 공세적 조치에 비해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은 몇 가지 치명

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대북포위망의 핵심인 한미일공조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조치를 실행할만큼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11일-12 열린 티록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 핵의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의 폐기와 미국의 북체제 보장의 동시조치'를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북핵로드맵'을 제시하고 미국이 이를 거부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포위망에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내용 가운데 군사개입 조항의 삭제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러시아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적대정책을 반대하며 식량지원과 시베리아 유탄전력의 북송사업 등 대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무산은 이러한 점을 잘 말해 준다.

셋째, 미국내의 여론도 부시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과장, 왜곡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이라크사태가 장기적 게릴라전 양상을 띠며 미공으로 빠져들어감에 따라 부시정권의 일방주의적 군사정책에 대한 회의와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남북관계의 지속이다. 미국이 대북압살정책에 열을 올리며, 노무현정부를 압박하여 북핵문제와 경협을 연계한다는 입장을 관철하였고 수구세력을 부추겨 '대북송금의혹 특검'을 통해 남북관계의 파행을 획책하였으나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단계에서 이를 북미관계의 전환이나 전쟁위기의 해소로 바라보는 것은 금물이다. 북미대화의 재개는 한반도 정세가 한차례의 위기를 넘긴 측면과 함께 또 다른 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양측면이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은 적대적북미관계에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 이점에서 미국의 근본적 태도에 변화가 없다, 7월 23일 백악관 매클렐런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북한측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핵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유인책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3자회담을 다자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미 양자간에 핵동결과 불가침보장의 동시조치라는

기본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다자대화는 대북압력을 국제화하려는 술책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3자회담이 재개된다하더라도 다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월에 북미간에 최소한의 접근을 보지 못할 경우 9월에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10월 1994년 제네바 합의 만료 시한을 앞두고 8월 말 경수로사업 중단, 9월초 북의 핵보유국 선언, 9월 대량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가하고 있는 11개국의 합동군사훈련, 9월 유엔총회에서의 안보리의장성명 재추진 등으로 이어진다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통제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8월 한 달동안 우리가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서 나서는 쟁점

한반도의 전쟁위기구조는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올해로 체결 50년을 맞는 정전협정은 전투행위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쟁을 완전 종식시키는 평화의 정착은 아니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른 전쟁의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후속논의가 미국의 의도적 회피로 무산된 채 50년이 지난 동안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거의 다 무력화되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마땅히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집중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는 1) 북미간의 불가침과 적대적 관계의 종식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프로세스이행 (6.15공동선언의 이행) 3) 불평등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해체 4)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체제와 경제협력공동체 구축이라는 세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 가지 방향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요체는 북미간의 불가침과 적대관계의 종식이다. 2)번과 3번, 4번은 1)번의 진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1)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은 핵동결의 조건으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은 대북적대정책의 폐지와 체제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출되고 있으나 이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에 관한 문제이다.

74년 3월 이북은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을 위한 북미 협상을 요구한다. 이는 73년 남북조절위원회 2차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남북평화협정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남북평화협정은 7.4 공동성명에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외세에 간섭을 받음이 없이 라는 자주 조항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시도라면 74년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북미간 직접 협상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도였다. 84년 1월 남북미간의 3자회담을 제안하면서 북미간 평화협정, 남북간 불가침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한 뒤 통일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남북간 정치협상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북미 평화협정을 골간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 뒤 남북간 정치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발상이 일정한 변화를 보인 것은 90년대 초반이다.

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 주석은 고려민주연방제를 점진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고 92년 1월 김용순과 아널드 캔터간의 북미 차관급 회담에서 김용순은 주한미군 주둔을 일정한 기간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4년 4월 28일 북미간 핵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이북은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제안한 바 있고 이 제안은 96년 2월 잠정협정 제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잠정협정에서는 현 단계 북미 관계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정전협정 상의 관리기구(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신에 새로이 북미간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잠정협정의 핵심은 평화협정의 이전 단계로써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이 단계에서는 북미간 군사위원회와 남북합의서에 기초한 남북군사위원회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단 정전협정은 미국의 한국 주둔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전략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잠정협정 단계에서는 과도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되 그 지위는 한반도의 평화를 조선인민군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90년대 초반부터 구체화된 이북의 일련의 주장은 정전협정의 폐지와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의 수립, 느슨한 연방제 수립으로 구체화되어 있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위와 성격이 바뀐 가운데 한시적으로 주둔할 수 있고 남북은 느슨한 연방제에 기초한 통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74년 북미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통일의 전제 마련 또는 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주한미군 철수를 선결 조건으로 하여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라는 구도와는 일정한 차이

가 있는 것이다.

최근 불가침 조약 주장은 90년대 초반의 입장의 연장선하에 있으면서 이를 시대적 정황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쟁의 당사자인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과도적 주둔을 일정기간 용인하면서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잠정협정이 한반도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관리한다는 말 그대로 과도적 성격의 협정이라면 북미불가침조약은 상호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으로 북미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보장체제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프로세스이행 (6.15공동선언의 이행)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남북 평화협정체결론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결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한반도 전쟁위기 구조의 핵을 이루고 있는 북미사이의 안전보장과 적대관계 종식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에 의한 대북 무력사용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미 사이의 불가침 및 평화보장문제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문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견해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둘째, 한국전쟁의 당사자이자 대북 적대적 무력으로서의 주한미군 문제 해결의 방도를 담고 있지 않다.

한국군 교전 당사자의 일방이자, 정전협정체결당사자의 일방인 유엔군은 사실상 유엔군의 옷을 입은 미군이었던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미국은 정전협정의 후속회담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고 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영구주둔하게 되었다.

즉, 주한미군의 본질은 대북적대적 무력이라는 것 정전체제 아래 교전당사자의 일방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구축이 가능하지 않다. 물론 주한미군철수 문제는 북미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미사이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대북적대적 무력일 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의 담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보장체

제의 또 다른 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셋째, 남북평화협정체결론은 남북사이 평화보장에 관한 문제를 불가침에 관한 문제로 협소화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에서 남북문제는 중요한 한 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남북사이의 문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문제이다. 그런만큼 남북관계는 전쟁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노력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포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밀고 나가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남북 사이 '평화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북미사이의 불가침과 적대적 관계의 종식 없이는 한계가 뚜렷하다. 북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상존하는 조건에서 북에게 군축을 요구하는 것은 북에게는 무장해제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남북,미 3자평화협정 체결 주장도 있는데 이는 남북평화협정체결 주장에 비해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남북관계를 평화보장문제로 한정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보장체제의 한 축을 이루는 남북 사이의 문제는 평화협정체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민족적 협력과 공조를 통해 외세의 간섭과 위협, 침략에 맞서서 대항하는 민족적 역량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는 현단계에서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관한 문제이다. 6.15공동선언은 그 내용에 있어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선언의 문구에만 집착하는 견해이다.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문화 되고 만다.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정상이 공개적으로 직접 만나 직접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이전의 어떠한 선언 보다 강한 실행력을 갖고 있다. 이는 2000년 6.15공동선언이후 북미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어 온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서도 실증된다.

2000년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가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파괴되지 않았다면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렸을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사이의 구체적인 통일방안과 이를 실행해 나갈 기구(민족통일기구) 구성 등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3. 과제

○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이 중요하다.

분단된 한국에서의 평화운동은 분단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의 종착점은 통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은 실천적 결합이 취약하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운동은 평화운동의 상대적 독자성을 인정하고 통일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평화운동은 통일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범국민적인 반전평화운동, 이를 밀고 나가기 위한 '반전평화국민운동본부'의 건설이 시급하다.

그동안 이러한 범국민적인 반전평화운동기구 구성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직건설문제로 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조직이 주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운동이 필요한 때이며 조직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데 복무하는 방향에서 꾸리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실현 100만 인간띠잇기 국민운동'과 같은 범국민적 반전평화운동을 합의하고 이를 밀고 나가기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6.15공동선언을 밀고 나가기 위한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평승하여 대북송금의혹사건에 대한 특검 등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무로 돌리려는 시도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것과 함께 '6.15공동선언 이행 국회결의안 채택운동'과 같은 운동이 평통할 때이다.

○ MD구축,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전쟁을 위한 기지이전과 확대,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불평등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50년을 맞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 전시작전지휘권 반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평화운동과 통일운동 - 쟁점과 과제

양관수 고려대 객원교수, 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들어가는 말

전후 미소중심의 냉전대립체제가 전세계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최초의 전쟁, 한국전쟁(6.25)이 '정전협정'이라는 휴전상태로 종결된 이래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6.25는 미소 양 강대국의 분단강요와 민족내부의 이념적 대립이 상호 결합되어 발생했고, 전쟁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사상자와 국부의 파괴를 기록했다. 6.25는 인명과 재산, 자연 환경의 심대한 파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모든 면에서 후퇴와 왜곡의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남북 모두 50년이 지난 오늘까지 후유증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통탄할 현실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휴전'이라는 전쟁상태로 50년간 살아오면서 전쟁 재발의 위기와 불안을 항상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상황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남북간에는 그 동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남북에 존속하고 있는 냉전잔재, 한반도 주변국가간의 대립, 특히 미국의 반대와 지연전략 때문에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고, 별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대립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문제에 앞서서 핵무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그것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국가부터 감축 폐기하면서 적게 가진 국가나 새로 개발하려는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억제해야 실현가능하다는 데 있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는 세기적 전환기에 경제적인 봉쇄와 군사적 공격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공격이나 침략목적보다 체제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법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이 우선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탈냉전기에 들어간 이후에도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북의 평화발전은 물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지정학적 위치가 원인이 되어 전쟁통일도 흡수통일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방법은 '협상통일'일 수 밖에 없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통일'은 전쟁통일이나 흡수통일보다 시일이 많이 걸리며, 선행단계로써 평화정착이 실현되어야 한다. 전쟁위험이 없을 만큼 평화가 정착된 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로소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연방제, 남북연합제, 중립국 통일안 등 많은 통일방안이 수없이 논의되었고 나름대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원인은 평화정착이라는 선행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데 있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 대장정에서 현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평화운동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선행적 통일운동이라는 점에서 두 운동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통일이라는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평화는 선결적으로 실현해야 할 전략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포스트 냉전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의 배경

세계적 수준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 당하는 사태가 반복되는 데는 다음 두 가지 배경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냉전해체의 비동시성

1990년을 전후해서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세계수준의 냉전

해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다. 동북아시아 수준에서의 냉전도 다소 속도가 느리나 꾸준히 해체되어왔다. 그 결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이미 지역평화의 정착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는 상태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가동되었던 4자회담이나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 지역내 국가들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협력은 이러한 조류에 부합하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지역에서는 미국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 중일간 점증하는 군사적 긴장, 중국의 급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 등 냉전시대의 잔영으로 남아 잠재적 긴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북미, 북일 관계는 적대적 대결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대결과 협력>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냉전구조 내에서 대립국가간에 이념, 정치 군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행동의 원칙, 즉 <적대성, 상호불신, 동맹성, 배제성> 등을 탈냉전 후에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반도 정세를 지배하는 주요요인이 북미, 북일 간의 적대성, 남북간의 상호불신, 한미동맹, 북중동맹 등이라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대량파괴무기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도 양국관계가 냉전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남북관계도 정상회담 이후 냉전 문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잔재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지역에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탈냉전의 관행과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다.

2) 지역과 세계적 차원에서 전략적 균형의 와해이다.

최근 한반도문제는 사회주의진영의 붕괴로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고 미국의 일방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20세기 말에 발생한 사회주의의 붕괴는 자본주의적 가치가 21세기 인류의 보편적 생활방식으로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개념으로 상징되듯이 <단일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냉전시기 미국의 통제 밖에 있었던 국가들의 반미적 행동, 대량파괴무기는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2.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

1) 북핵문제

(1) 문제의 본질: 북한은 60년대 이후 핵 개발과 미사일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냉전기에는 미국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단을 갖지 못했으나 사회주의권 붕괴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이념적 동맹국이 사라지자 미국은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압력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없이 생존자체가 곤란하게 된 현실에서 미국과의 타협을 선택했다. 타협의 대가로 미국에 요구했던 것은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이다.

* 제1차 핵위기(93-94)는 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 일단 해소되었다. 미국이 KEDO를 통해 200만 킬로와트 경수로 제공을 주선, 2003년까지 1차 경수로 완성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은 핵 개발을 동결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 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북한의 핵 개발 의혹, 미국의 중유제공 일정 지연, 경수로사업의 지체 등이 뒤얽혀 2002년 10월 켈리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 제2차 핵 위기(2002.10월~현재)

제2차 북 핵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시정부는 사실상 중국을 목표로 한 핵선제 공격 관련 미사일방어(MD)의 연구, 개발,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계속 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적대적 대립을 완화시키려는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고, 고이즈미 일본수상이 2002.9월 평양 방문하여 북일간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려고 하자 미국은 10월 켈리 방북 때 북한과 오고간 대화(객관적으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를 왜곡하여 2차 '핵 소동'을 일으켜, 핵전쟁 위협을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본다(Joseph Gerson 평화경제안전회의 의장, 'A Dangerous Game', 2003.6.16. 6.15공동선언 제3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빅터 쉐(Victor Hsh, 미국 장로교 Church World Service 수석자문위원)는 "북미간 위기의 원인은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 조작한 것이며, 파키스탄으로부터 오래 전에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켈리 방북 시 부시정부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북한과의 대립을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라크침공의 명분도 이라크가 은닉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세웠

지만, 최근 미 CIA의 전 국장이나, 영국의 정보기관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이 정보조작하여 이라크침공의 명분을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전쟁도발을 위해 정보조작과 여론조작을 교묘하게 자행해왔다.

또한 미국을 소외시킨 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동북아경제권에 대해 이 지역에 긴장을 조성, 미국이 정치 군사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북 핵위기'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가상 적, 라이벌로 규정되고 있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사태를 미국은 극력 저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전력부족상태에서 위협적 수준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량을 추출할 수 있는지, 핵무기 1-2개 제조가능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핵 실험없이 핵무기 완성이 가능한지 등 기술적으로 초보적 문제에 대한 검증, 증명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북한의 핵이 한반도와 세계를 인질로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치밀하게 인식조작이 진행되고 있다. 원래 북한은 체제보전(방어수단)수단으로 핵개발을 시작했으나, 94년 제네바협정에서 '에너지공급 - 핵 동결'이라는 교환조건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적대국가로 규정, 제네바협정을 먼저 파기했고, 중유공급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북한은 체제보전을 위해 '방어적 공격'으로 전환했고, 그 후 '핵무기 보유, 핵개발 강화' 등 협박성 발언으로 위기를 에스칼레이트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다. '북핵의 실체'가 증명되지 않고 애매한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데, 피해보고 있는 것은 한반도 우리민족 뿐이다. 그 외는 '위험한 게임'을 즐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유사법제를 통과시켜 전쟁할 수 있는 국가체제를 정비했고,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MD)를 확산시키면서 거액의 무기장사를 하고 있다.

2) 미국의 세계 패권 독트린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미국은 세계유일 초강대국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독트린을 채택했다. 레이건 정부의 차별적 역지력은 태평양과 아태지역, 지중해와 유럽 최대 석유생산지역인 페르시아만과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우위적 지배를 통해 장기적으로 세계지배를 가시화시켰다. 현재 부시정부의 강경파인 덩 체

니(부통령, Dick Cheney)와 폴 울프위츠(국무부 장관, Paul Wolfowitz)은 전 부시 정부의 전략독트린의 초안을 작성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어떤 지역내 또는 세계적 라이벌의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미국전략의 기본적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991년 걸프전쟁 때 '사막의 폭풍(The Desert Storm)'작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쟁의 목적은 후세인의 야욕을 억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 전쟁은 중동 원유 사용 및 통제권에 대한 이라크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본, 독일, 사우디, 스웨덴 등 미국의 우방국들을 미국의 독트린에 훈련시키는 것도 작전의 목표였다.

클린턴정부의 전 분쟁에서의 우위 독트린(Full Spectrum Dominance Doctrine)은 미 국방부가 어떤 나라든지 <어떤 경우, 어떤 권력형태>로든 지배하려는 패권 전략이다. 당연한 결과로써 선제공격 위협, UN질서나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위배하고, 미국주도로 나토가 세르비아 공습을 실행케 하는 등 보복테러가 이어졌다. 클린턴 정부 때 CIA국장이었던 존 도이치(John Deutch)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제6조(핵무기를 협상을 통해 폐기하도록 명시한 조항)에 대해 '미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 조항을 이행할 의도가 없다'고 공언했다.

현재 부시정부는 전 정부(레이건, 아버지 부시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공유했던 최악이자 가장 위협스러운 제국주의적 독트린을 통합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작년 9월 의도적으로 이라크에 대해 핵선제공격을 시사하면서 대량살상파괴무기의 제거라는 명분 이외에 정권타도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공포했다.

전 부시 정권도 그랬듯이 현 부시정부는 UN헌장을 위반하면서 라이벌국가의 부상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핵전쟁을 포함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라이벌 국가란 이라크, 북한, 이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유럽연합(EU)도 적용된다. 부시정부의 핵 정책과 전략(Nuclear policy Strategy)에 의하면 미국의 핵무기는 궁극적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자원방어위원회(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보고에 의하면 핵무기가 향후 50년간 미 군사력의 초석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미국은 핵선제 공격능력으로 이라크, 이란, 북한, 시리아, 중국, 러시아를 위협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제(MD)구축 및 배치의지를 재천명하고, 새로운 핵무기의 조사, 개발, 시험발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공화당이 다수인 미 의회에서 새로운 <지하병커 파괴용 핵폭탄 조사>를 위한 기금 승인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므로써 <핵무기 사용에 관한 금기사항>을 파기하는 데 완전히 성공했다.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북한의 병커나 터널들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부시정부가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경제통합방식>을 이 지역국가들이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미중간 이해관계가 깊어지고, 반테러 전쟁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양국간 경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부시독트린은 여전히 중국을 미래의 경쟁자로 보고 있다. 부시정부가 출범하기 전 발표되었던 랜드 보고서(Rand Study)에 의하면 아태지역에서의 미 군사력의 증점을 남쪽에 드는 방향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부시는 반테러와의 전쟁을 이용하여 보다 완전이 중국을 포위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인도에서 미군의 재배치와 새로운 군사기지 설치,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비핵화를 전제로 일본이 강력하고 추종적인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군사대국화는 저지할려고 한다.

3) 중국의 대북정책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중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 국가로 부각되고 있고, 역할면에서 보면 현재 미국의 대칭점에 서있다. 미국은 북한에 적대정책으로 대립관계에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안전에 대한 위협의식을 감소시켜주는 지원군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절박한 식량위기에 북한이 처해 있을 때 막대한 지원을 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국제정세를 의논하고 개방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2000~2001년 사이 두 차례나 방문한 곳이 중국이었다. 부시정부가 등장한 이후 MD관련 해서 북한이 가장 먼저 협의하고 의존해온 나라가 중국이다.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도 중국의 중재 조정노력의 덕택으로 성사되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 지원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또한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도 한국의 2위 교역국가로 부상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밀접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남북 양쪽에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형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 당사자간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하면서 <공존과 안정지향적 방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을 할 것이며, 한국 입장에서 북핵문제가 <북미협상 일변도>로 기울어질 위험성을 막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인식과 접근방식을 보면

(1) 군사적 모험주의 반대, (2) 무력흡수 통일과 봉쇄정책 반대, (3) 내부붕괴 방지, (4) 중국식 모델에 의한 북한의 개방, (5) 교차승인의 완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안>을 지지했지만 북핵문제의 근원에 대해서는 북한에 동정적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부추긴 것이 바로 <한미연합 핵전략>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 북한의 핵개발은 90년대 이후 경제피폐로 재래식 군비증강에서 한국에 뒤떨어지게 되자,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안보보장 받기 위해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을 확보함으로써 역지능력을 담보하고자 했다는 견해도 있다(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1998).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인식하지 않는 이상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제네바합의(북미기본합의)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이 합의에 따라 일정대로 추진되면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도 비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2차 북핵문제가 터진 이후 중국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화는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하게 될 것이며, 특히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고려할 때 이것은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성장정책에 커다란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정전체제를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하자는 제안과 4자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의 저변에는 자신의 국익증대와 미국견제라는 이중의 목표가 숨겨져 있다. 중국은 남북직접대화는 지지하지만, 북미만의 협상에는 반대한다. 이런 점에서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4자회담보다 북미평화협정을 선호하는 북한의 이해와도 배치된다.

4) 일본의 대북정책

일본은 90년대 이후부터 전수방위에만 한정되어 있는 평화헌법 제9조를 단계적으로 형해화시키면서 전쟁에 참여는 물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체제를 일관되게 만들어 가고 있다. 1992년에 일본은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국제적 평화유지를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제평화유지군(PKO)에 참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자위대의 해외출동에 길을 열어 놓았고, 평화유지라는 간판 뒤에서 사실상 자위대의 군사작전훈련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제2단계로 97년 미일사이에 합의된 신가이드라인(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군사행동을 할 수 있고 극동의 지역범위를 넘어서 일본이 미군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99년에 제정된 '주변사태법'(주변사태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은 '주변유사시'에 자위대가 미군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군군사작전을 보조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가 사실상 전쟁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주변의 지역범위에 관해서 중국 대만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로 나왔지만 사실상 한반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주변유사'도 한반도의 유사를 의미하는 데 '유사의 내용'에 관한 논란이 많았지만 애매한 상태로 넘어갔다. 2003년 6월6일 통과된 '유사법제'는 일본정부가 한반도의 '유사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본이 능동적으로 전쟁에 가담하거나 일으킬 수 있게 되어있다. 이전의 자위대의 군사화단계에서는 미군을 지원 보조하는 수동적 소극적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유사법제의 실현으로 일본이 능동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다는 점때문에 그 위험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제 일본은 헌법 제9조의 전수방위라는 기본전제를 무력화시키는 '조용한 쿠데타'를 실행한 것이다. 최근에 일본 자민당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고 개헌까지 거론하므로써 '전쟁국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최종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전쟁국가화는 미국 부시정권의 대일정책의 기본을 제시한 리처드 아미티지(현재 국무부 부장관)보고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에 핵전쟁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미치는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미일관계를 미영동맹수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3년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해 방위정책을 '위협대응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한다(니혼게이지신문 7.3일 보도).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을 빙자한 '한반도 유사'를 조장하여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조건이 조성되어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1. 유사법제 처리 배경

고이즈미 내각은 북한의 <핵, 미사일의 위협>을 과장 선동하여 일거에 유사법안을 성립시켰다.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서두른 것이 아니고, 일본이 조작한 '북한위협론'은 유사입법을 통과시켜 자위대 전력을 증강(공중급유기, 순항미사일 도마호크의 보유)시키는 구실로 이용한 것뿐이다. 유사입법은 일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으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능동적으로 '공격을 가하기 위해 필요'한 전시체제의 정비인 것이다. 이 법안의 본질은 <인권존중, 국회의결> 등 문구를 추가한 <수정안>에서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2. 유사법제의 목적- 자위대의 선제공격에 프리핸드를 주는 것

이시야부리 방위청 장관(4.24, 중의원유사법제 특별위원회 발언)은 <미국이 일본 주변국을 선제공격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무력공격사태나 무력공격예측사태의 적용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한 국가가 일본에 대해서도 '공격의도를 표명'한다든지, '공격이 추측되는 상황'으로 된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견해이다. 즉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일본의 참전이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현직 장관의 견해이다. 북핵 문제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이 어렵다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일본도 유사법제를 발동하여 한반도 전쟁에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정은 주변국에 대한 무력위하이고, 자위대에 의한 선제공격에 프리핸드를 주는 것이 되며,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다. 또한 이런 견해는 일본의 자위대가 아프칸, 이라크전쟁에 참전, 살인행위에 나선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27,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이시야부리 장관은 '적기지 공격능력을 가진 미사일 토마호크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것도 급속한 헌법무시의 참전기성사실화 동향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이즈미 내각은 '집단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점령군참가는 교전권의 행사'라는 역대정권의 국회답변은 쳐다보지도 않고 공언이 평화헌법을 짓밟고 있다.

3. 대처조치의 발동: 기본적으로 수상의 권한

'유사사태'에 관해서 수상의 판단 뿐만 아니라, 국회결의에 의해서 <무력공격사태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민통제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처기본방침>의 결정은 국회의 사후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있지만, 그에 근거한 <대처조치>의 발동은 기본적으로 수상의 권한이고 국회의 관여는 한정되어 있다.

유사법제 14,15,16조에는 <무력공격사태>로 진입하면 자동적으로 그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갖는 수상이 평상시 위임되어 있는 자치체의 권한을 박탈하는 <대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치체나 <지정공공기관(의료, 전력, 가스, JR, NTT, 방송)>에 대해서 <총합조정>이라는 <동원, 지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규정을 담은 국민보호법제를 1년 이내에 정비하기로 합의되어서, 국가권한의 일원적 집중 규정의 움직임은 빨라지게 되어 있다. 문제는 수상의 <전권위임>이라고 할 만한 이 조항이, 여야 협상에서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정공공기관에 <민간방송>도 포함되어 있어서,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제외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민방을 포함, 방송기관이 <무력공격사태>에 있어서 <동원 통제>의 대상이 되는 구조>에 아무런 제한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사태'를 빙자하여 언론탄압 여론조작을 획책할 수 있게 되었다.

4. 유사법제의 위험성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은 '유사상황'에 대한 일본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제공격을 가능케 한 법이다. 이법의 유사라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애매모호한 데 사실 '전쟁상태'를 의미하며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로 호도하기 위해 <무력공격사태>로 표현을 바꾼 것뿐이다. <무력공격>상황(무력공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이 발생한 사태, 사태가 긴박하여 무력공격이 예측되기에 이른 사태라고 판단되면 수상이 자위대에 대기명령이나 방위출동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상대방의 의도나 현실의 대응이 어떻게 되든 수상이 <무력공격사태>로 인정한 것만으로 전쟁상태로 돌입할 수 있는 것이다.

<무력공격사태>는 일본의 재외공관이나 해상선박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어 있어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무력공격사태>는 무력공격사태와 무력공격예측사태로 구분되어 있으나 선제